



탈원전, 에너지 세대교체 시작됐다

2017 세법개정안 '일자리 늘리고 소득분배 개선'
실수요 보호·투기 억제해 주택시장 안정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원리의기본! 식중독예방 세션 시작됩니다

6가지 식중독 예방 실천 POINT!



01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02 익혀먹기

중심온도 육류 75℃,
어패류 85℃ 1분이상



03 끓여먹기

물은 끓여먹기



04 소독·세척하기

과일과 채소는 염소소독
(100ppm) 5분 침지, 흐르는
물3회 세척 후 절단



05 보관온도 지키기

조리 후 60℃ 이상 또는
바로 식혀 5℃ 이하 보관



06 구분사용하기

조리기구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태양광 발전 설치 어렵지 않다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다. 특별한 게 있다면 집집마다 설치된 태양광 집열판뿐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동부아파트는 371세대 중 357세대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 자가발전을 실천하고 있다. 그 비율은 96%다.

태양광이 거의 모든 가구에 보급된 계기는 한 주민의 자발적 설치에서 시작됐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모습은 호기심을 사기 충분했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고 그는 설치 후 무엇보다 전기요금에 절약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도 생각하고 전기요금도 아끼고 일석이조였다. 전 주민이 이러한 효과를 나누면 어떨까, 입주자대표회의는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가구당 63만 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다. 더구나 주민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40만 원, 동대문구에서 10만 원의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도 가정마다 13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논의 끝에 주민 자부담 비용은 아파트 수익사업 잉여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주민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지난 3월부터 설치를 시작했고 장기 해외 체류자, 설치 시간이 어긋난 주민과 막연한 거부감을 가진 극소수의 주민을 제외하고 모든 가정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설치됐다. 이 과정에서 단지 내 유실수 등으로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1~3층 저층세대를 배려했다.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앵커형으로 설치한 것이다. 즉 음영지역 세대들도 동참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했다. 저층과 옥상을 연결하는 추가 비용이 필요했지만 같은 단지 주민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우리 단지는 82㎡(25평형), 109㎡(33평형)로 2~4인 가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후 평균 1만 3000원의 전기요금에 절약됐다. 처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주민들도 눈에 보이는 감소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었다. 우리 아파트 사례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선도 모델로 홍보됐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례가 이례적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홍릉동부아파트는 '2017년 서울시 환경상'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대외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인정받자 수상에 대한 상금도 생겼다.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돼 지원금도 받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금을 다시 주민을 위한 시설에 투자했다.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센서등을 LED로 교체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공동 전기요금을 낮추며 그 몫을 주민을 위한 시설 개선에 다시 돌렸다.

이제 우리는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지 않고 한여름 무더위에 부담 없이 에어컨도 켤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먼 미래의 에너지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파트는 전 세대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후에는 경로당, 아파트 상가 등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익을 또다시 주민을 위해 나눌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한다. 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를 위한 큰 행동이 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결코 어렵지 않다.

이용수 | 서울 홍릉동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여름나기의 절정, 즐겁고 건강하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7월 말부터 연일 발 디딜 틈이 없다.
휴가철 한복판 무더위에 전국의 바다와 계곡이 인파로 가득 찼다. 평년 여름보다 폭염주의보도 잦은 편이다.
이런 폭서기엔 피서도 피서지만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때. 바야흐로 여름나기의 절정이다. 이 더위 잘 이겨내면 곧 가을.
8월 7일은 절기상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立秋)다. 어김없이 돌아올 그 계절을,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이상문 | 위클리 공감 기자

디지털 <위클리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포스트 페이스북 탭진 블로그

post.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blog.naver.com/mcst_pr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위클리 공감 누리집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소감이나 제안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16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감 되새김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편서를 이용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34
디지털큐브빌딩 13층 (주)조선뉴스프레스
<위클리 공감> 편집부 앞(우 03909)

지난 호를 읽고



특집 기사를 읽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까지 올랐는데 2020년이면 1만 원 도달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임금 인상 문제는 늘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으니 큰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제시한 바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최명연 | 대구 달서구 죽전길

힐링과 교혼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 소록도! '오감 만족 대한민국 농산어촌 여행' 기사에서 우리 이웃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긴 곳을 추천받았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듣기만 했던 '시리도록 아름다운 섬, 소록도'로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가족과 함께 그토록 아름다운 소록도에서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한가로이 지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족의 추억은 물론 우리네 몸도 마음도 한 뼘 자라 있겠지요.

서수련 | 울산 남구 두월로

그린리모델링 인증을 받은 '베다니동산' 기사가 참 흥미로웠어요. 친환경 공사를 해서 새집증후군을 없애고 에너지 소요량도 63% 이상 줄일 수 있다니 더 눈이 가더군요. 더구나 국내 최초 그린리모델링 건물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라 의미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제 곰팡이, 결로, 악취로 힘들어 할 일은 없겠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중증장애인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김세윤 | 서울 마포구 양화진길

탈원전 관련 기사를 읽고 탈원전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 전 세계적 추이,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해법 찾기 등을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우려로 탈원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가진 잠재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세계 탈원전 모범 사례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야 |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Quiz

공감 415호 되새김 퀴즈
정성껏 준비한 정책 정보지 <위클리 공감>
기사를 천천히 곱씹어 읽은 뒤 답을 찾아보세요.
정보도 얻고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01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2030년 ○○○○ 비율을 20% 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신재생 3020 이행 계획'을 시행하며 1조 6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02

정부가 ○○○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놔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규제 카드가 등장했다.

03

민원서류 발급, 여권 만료일 확인, 소득확인 증명 등 정부 각 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를 통합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 한 번에 만날 수 있게 됐다.

413호 퀴즈 정답
[베뉴투어, 5개년 계획, 7530]

당첨자
강미야(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김세윤(서울 마포구 양화진길)
서수련(울산 남구 두왕로)
최명연(대구 달서구 죽전1길)

도전! 나도 해볼까?

스포츠 및 체육시설 안전 국민참여 공모전

공모 내용 스포츠(체육시설 포함) 안전문화 확산 UCC, 포스터, 표어
응모 자격 개인 또는 팀(UCC는 1~4인 이내, 포스터·표어는 개인 참여만 가능)
접수 기간 9월 25일까지
응모 방법 공모전 누리집(www.sportsafe.co.kr)에서 접수
수상 혜택 [UCC] 최우수상 1편 300만 원, 우수상 1편 150만 원, 장려상 2편 각 50만 원
[포스터] 최우수상 1편 200만 원, 우수상 1편 100만 원, 장려상 2편 각 40만 원
[표어] 최우수상 1편 30만 원, 우수상 1편 20만 원, 장려상 2편 각 10만 원
유의 사항 [UCC] 2분 내외 mp4·wmv·avi 형식, 50Mb 이내의 광고·애니메이션·다큐·영화 등
[포스터] A2(420×594mm) 크기 세로형, 해상도 300dpi 이상, 10Mb 이내 jpg
[표어] 16자 내외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전 운영사무국 02-334-700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육군 간부 홍보 영상 공모전

공모 내용 육군 간부의 멋스러움과 매력 어필 영상
응모 자격 제한 없음
접수 기간 9월 18일까지
응모 방법 1차 유튜브(www.youtube.com)에 올린 후 동영상 주소를 공모전 누리집
(goarmycontest.com)에 붙여 넣음
수상 혜택 최우수상 1명 500만 원, 우수상 1명 300만 원, 장려상 3명 각 100만 원, 입선 10명
기념품 증정
유의 사항 30초~1분 이내 mp4·avi 형식 동영상
문의 육군본부 공모전 운영사무국 02-2143-5830, 누리집 Q&A 게시판

2017 노벨상탐구 발표경연대회

공모 내용 '나의 상상력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슬로건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기초과학 연구 주제와 그 연구 성과가 학계와 인류 사회에 미칠 영향
력을 제안·발표해 경연
응모 자격 고등부, 대학부
접수 기간 8월 20일까지
응모 방법 2개 양식을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내려받아
이메일(nobel_science@naver.com) 접수
수상 혜택 [고등부] 대상 1팀 100만 원, 금상 1팀 50만 원, 은상 3팀 각 30만 원, 동상 10팀 이내
각 20만 원 [대학부] 대상 1팀 300만 원, 금상 1팀 100만 원, 은상 3팀 각 50만 원,
동상 10팀 이내 각 30만 원
문의 국립과천과학관 대회 운영사무국 02-2052-6806

Weekly

공감

No.415
2017.08.07



- 01 통窓
태양광 발전 설치 어렵지 않다
- 02 공감포토
여름나기의 절정, 즐겁고 건강하게
- 04 참여공감

포커스

- 08 국정수행
북 도발 대응 우리 군 독자 전력 조기 확보
갈등 있는 정책은 국민과 직접 소통 원칙으로
- 10 주택시장 안정화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 금융규제 강화
- 12 세법개정안
투자·고용 촉진 '고용증대세제' 신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30% 세액공제
- 16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
10월 21일까지 최종 조사 권고안 제출
- 18 탈원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
전력수급 문제 없고 전기요금 현재 수준 유지

특집

에너지 세대교체 시작됐다

- 24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에너지 정책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로 확대
원전·석탄 중심에서 재생·분산전원 체제로 전환
- 26 해외 사례
탈원전·탈석탄 흐름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재생에너지 투자 2860억 달러, 146개국 정책 마련
- 30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여주 수도권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경북 영양권에 전국 최대 풍력단지 조성
- 32 현장취재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에너지 자립 현장을 가다
- 34 |기고|
에너지 전환의 골든타임을 잡자
- 36 공감카툰



표지 이야기

충남 아산 예꽃재는 에너지자립마을 1호로 유명하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보일러실에는 지열보일러가 자리하고 있다. 예꽃재가 에너지자립마을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컸다. 태양광 발전과 지열에너지로 예꽃재의 에너지 자립률은 약 80%에 달한다. 권세은 예꽃재마을 조합장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곳이 많아져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발행일 2017.08.0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도종환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044-203-3014
제작협력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팩컴코리아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수신자부담) 080-906-4480



24



46



56

국정운영 5개년 계획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 |
|---|--|
| <p>38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p> <p>40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p> <p>42 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시민 금융지원체계 구축, 교통·통신비 절감</p> | <p>4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신속표준제도 도입,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p> <p>46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창업국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p> |
|---|--|

48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교육·여성·보건복지·환경 부문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확보,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행복공감

- | | |
|---|--|
| <p>52 행정 7만여 정부서비스 한 곳에... '정부24' 개통</p> <p>53 사진으로 본 이 주의 역사 유창혁 9단,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우승</p> <p>56 일자리 시니어 전문 고용 기업 에버영코리아 근로자 권선옥 씨</p> | <p>58 명저로 읽는 과학세상 아날 아난타스와미의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남자〉</p> <p>60 문화, 지금 하루키 열풍, 부러워만 할 것인가</p> <p>62 문화마당 이번 주엔 뭐 하고 놀지?</p> <p>64 공感 오프 더 그리드 (off-the-grid)</p> |
|---|--|



- 54 평창인 ②
한국 스키 국가대표 1호 임경순
“지도자도 장비도 없던 그 시절, 정신력으로 승부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북 도발 대응 우리 군 독자 전력 조기 확보 같은 정책은 국민과 직접 소통 원칙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 측과 즉각 협의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국의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은

사드의 조기 배치, 전략적 자산의 조기 전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며 “양국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 실감할 강력한 조치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은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현안으로 눌러 쌓여 있던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최영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정책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은 소관의 업무가 있지만 소관이 아닌 문제도 연일 떠오르는 것을 알 것”이라며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교한 준비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 노동이나 세계 분야에서는 오래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힐 수 있고 일정한 범위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해 이해를 높여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해야만 정책이 성공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로 증원을 서둘러달라”며 “정부가 추구했던 일들에 대해 하나씩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오동룡 | 위클리공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이틀째인 지난 7월 31일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길 등반 중 만난 어린이의 손을 잡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휴가 중 국민소통 행보… ‘세일즈 외교’도 소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휴가 첫 행선지인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서 등산을 하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즉석에서 사진을 찍었다. 한 시민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이 사진을 올려 기사화되자 청와대도 지난 8월 1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흰 셔츠와 검은 등산복 바지 차림에 등산화를 신은 문 대통령은 땀과 가랑비에 젖은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산길에서 만나는 시민과 이 씨 가족 등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먼저 악수를 청했다. 이 씨 가족이 즉석에서 ‘셀카’ 촬영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예, 찍읍시다”라고 응했다. 경호원들이 따로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밖에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 속엔 문 대통령이 상원사와 인근에서 가족 단위 시민들과 자연스레 어울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경남 진해 군 휴양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주말인 8월 5일 복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 ICBM 도발 등 안보 위기에도 휴가를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 “휴가를 취소하면 대통령이 북한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주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한 조치는 모두 취하고 떠났으며 휴가지에서도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던 8월 2일 한국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리아미자드 리아추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진해 해군기지 내에서 접견하는 등 외교일정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과의 관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막대(MIKTA), 아세안+3(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G20 등 다자 무대에서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아미자드 장관은 “한국 측의 환대, 특히 문 대통령이 휴가기간에도 시간을 내어 접견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방산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휴식이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휴가를 독려했다. 휴가 기간에는 대북정책 방향 등 하반기 정국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 금융규제 강화

정부가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놔다. 일명 '8·2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8·2 부동산 대책은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카드를 포함한다. 서울 강남 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도 강화되는 등 역대급 고강도 부동산 규제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 구 전 지역, 경기 과천시와 세종시 내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효과뿐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

화 등이 적용된다.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남 4구와 용산·노원·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했다. 이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3일부터 즉시 효과가 발생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정비 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 유예 없이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점차 높일 예정이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세제, 금융 등의 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서울,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세대도 1주택 보유 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향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어진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해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까지 제한된다.



홍정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 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을 꾸준히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52만 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가 있는데,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호 계획 중 60%에 해당하는 10만 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희부지 활용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수도권 3만 호를 포함한 전국 5만 호에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구분	투기과열지구 (2017. 8. 3)	투기지역 (2017. 8. 3)	조정대상지역 (2016. 11. 3, 2017. 6. 19대책)
서울	전 지역 (25개 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 구)	전 지역 (25개 구)
경기	과천시	-	경기 7개 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 구, 세종시

가입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한다.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에는 전매제한이 신설된다. 지난 7월 18일 주택법이 개정돼 그동안 전매제한이 전무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풍선 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낮았

던 오피스텔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이번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G**

임영영 | 위클리공감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정부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으로 과도한 차입에 의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과열 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을 강화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 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자·투기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재건축·재개발 예정 단지 등의 상승폭이 커지며 일반 아파트 등으로 가격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택이 투기나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

가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 : 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 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 건축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하거나 주택 보급률 등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공급이 청약 1순위 대비 현저히 적은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했다.

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 방안은?

LTV, DTI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 자금, 소득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배려할 계획이다. 부부 합산 연소

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7000만 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가 해당된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올해 안에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서울 및 시행 시기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단,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투자·고용 촉진 ‘고용증대세제’ 신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30% 세액공제

정부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꿨다.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만 늘려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를 신설하거나 재손질했다.

정부는 8월 2일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3억~5억 원의 고소득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하던 세율 38%에서 2%포인트 올린 40%를 적용한다. 또한 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2%포인트 인상한 42%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구간에서는 2000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현행 22%에서 3%포인트 올린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

층에 대한 과세 기반을 넓혀 서민·중산층으로 혜택이 흘러가도록 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서민·중산층 소득 향상 세제 지원

올해 세법개정안의 큰 틀은 가계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유도해 ‘성장 주체’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를 덜어주면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30만 원(맞벌이 기준)에서 250만 원까지 올린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에 비해 감소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 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도록 했다.

월세 임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민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12%로 올렸다. 매월 50만 원씩 월세로 지출했을 때, 내년부터는 72만 원(현 6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 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로 포함했다.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인상을 했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 세제를 최대한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공제(150만 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산 지원인 점을 감안해서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신경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 세법개정안



어린이집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추가한다. 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0년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리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30%(현 15%)로 인상하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도록 했다.

일자리 중심으로 바뀐 조세 지원 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수록 세제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조세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그간 투자와 연계한 고용 간접지원책을 하나로 묶었다. 투자·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3~8%를 공제해주는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 정규직을 고용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쳐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만들었다.

새 제도에 따라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한 명당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2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했을 때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30%(일몰 3년 연장)까지 올리고 적용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고쳤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범위에서 세액공제됐는데 이를 20%로 올린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 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중·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고용·임금 증가의 유인책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옛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신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 증가분 가중치를 두 배 올리고 임금 증가분 계산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7000만 원 미만으로 낮췄다.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기반 확충도 지원한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2년 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의 1/2을 추가로

감면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 업종에 대한 감면율은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상향 조정한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보증평가 우수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대해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에서 투자 금액의 30~100%까지 소득공제해준다.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17년에서 2020년까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 세제도 고쳤다.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 30%에서 40%로 인상을 했다.

실패한 자영업자, 벤처 창업자에 대한 납세 의무도 낮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심사를 거쳐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체납세금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 성실경영으로 인정되면

소득세 세율조정

과표 구간	현행세율	개정안
1,200만 원 이하	6%	(좌동)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억 원 ~ 3억 원	38%	(좌동)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0%	42%

법인세 세율조정

과표 구간	현행세율	개정안
2억 원 이하	10%	(좌동)
2억 원 ~ 200만 원	20%	
200억 원 ~ 2,000억 원	22%	
2,000억 원 초과		25%

5000만 원 미만의 체납액을 징수 유예 혹은 체납처분 유예한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조치도 마련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2000억 원 초과'로 고치고 여기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개정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129개로,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연간 2조6000억 원가량의 세수를 더 거둔다.

매출액 대비 R&D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대기업의 일반 R&D 당기분 기본공제율 1%를 폐지했다. 다른 투자세액공제 제도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대기업이 적용받는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 3%에서 1%로 낮췄다.

고배당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9% 원천징수, 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제도인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세수 증대 효과 5년간 5조 5000억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세 지출을 줄여 재정을 늘린다. 전자신고가 정착 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현 세무대리인 400만 원(법인 1000만 원)에서 200만 원(500만 원)으로 절반이나 깎았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 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종료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넣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에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3곳을 추가했다.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 카드 매출액(봉사료 제외)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5년(2018~2020년)간 5조 465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은 6조 2683억 원으로 추정된다. 법인·소득세의 명목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에 따른 결과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2조 5700억 원인데, 이 중 1조 800억 원가량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세수 효과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

정과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축소로 각각 4000억 원, 1400억 원의 세수가 더 거뒀을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2조 5500억 원), 대기업R&D세액공제·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5700억 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 소비세율 조정(5700억 원) 등의 조치로 대기업의 세 부담은 약 3조 7000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추가 증세로 더 걸히는 세금이 6조 원을 넘어서지만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세수 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 등 세법이 손질되면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오히려 8167억 원가량이 줄어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일 "세법개정안과 관련,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및 재정 정책 방향에 맞춰 조세 정책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⑥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문답으로 보는 2017 세법개정안

Q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A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는 것이다.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 반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축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Q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은?

A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세제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여기에 창업·벤처 활성화 등을 지원해 일자리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예정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1인당 연간 중소기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대기업은 300만 원을 공제한다.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Q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A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중산층 연간 세부담이 8167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6조 268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Q 세입 기반 확충 방법은?

A 저성장·양극화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뒷받침이 되는 세입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 영세 기업 등을 지원해 사회통합·상생협력에 기여한다. 특히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인다.

Q 소득재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

A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져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이 미흡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서민·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은 축소하는 계획이다.

Q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은?

A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단독가구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양 자녀나 배우자 없이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현행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투자 &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 공제 (1년간) ※ 다른 고용·투자 지원 제도와 중복 배제 ● 공제 한도 : 상시 근로자 증가 1인당 1000~2,000만 원 (실제 실적 : 1인당 평균 420만 원)		
청년 고용 증대 세제	● 청년 정규직 고용 시 정액 공제 (1년간)		
	중소	중견	대기업
	1000 만 원	700 만 원	300 만 원

개정안

고 용 증 대 세 제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 공제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 다른 고용·투자 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구분 (단위: 만 원)	중소 (2년간)	중견 (2년간)	대기업 (1년간)
	상시 근로자	700 (1,400)	500 (1,00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1,000 (2,000)	700 (1,400)	300 (300)

자료 | 기획재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 10월 21일까지 최종 조사 권고안 제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의 주체, 목적, 공론화 방법을 발표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3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한 뒤 독립적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역할 범위로 설정했다.

지난 7월 24일 공식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공론화 위원을 선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탈원전 공약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

는 지난 2016년 6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 5월 말 기준 28.8%가량 지어진 상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찬반 의견이 갈려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결과 발표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건설 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쉽

게 이해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쟁점에 맞춰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찬반 양측의 전문가와 청중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실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찬반 전문가의 상반된 의견이 국민에게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 권고 자문기구 역할

이날 발표에서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론화위원회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31일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을 통해서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 위원장 역시 브리핑에서 “공론화 과정은 국무총리훈령에 정해진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한다”며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의견 수렴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론조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8월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여론조사가 그러하듯이 공론조사도 법적 근거 시비에 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정책을 정하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여론조사 기구에 대해서 법적 근거 유무를 따질 것 같지 않다”고 덧붙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을 숙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론화에 적합한 명칭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시민배심원단’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고 축약해서 쓸 경우 ‘시민참여단’으로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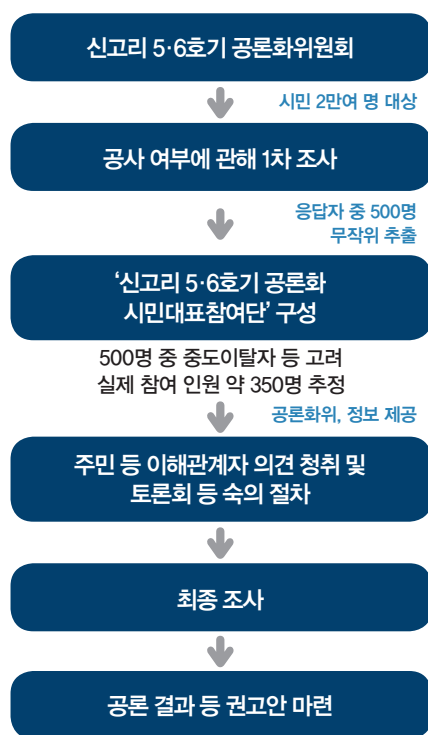
무작위 선발 시민 2만 명 여론 수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관한 1차 조사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19세 이상 시민 약 2만 명의 응답을 받아내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절차 전 2차 조사를 실시한다. 그 후 시민참여단에 자료집 제공,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진행한 뒤 최종 3차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업체 선정 절차를 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 결과 권고안 제작 과정



자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한 신속히 진행해 8월 중에는 1차 조사를 하고, 활동 시한인 10월 21일까지 2차·3차 조사를 마쳐 권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고, 중도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숙의 결과 도출 방법은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건설 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찬·반 표시와 관련해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 비율은 객관적인 사실로 권고안에 넣겠지만,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유의미한 편차인지 평가하는 것은 계속 고민할 부분이고, 공론조사가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 갈등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권고안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절차에 원전 입지 주민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조사분과(김영원·이윤석 위원), 소통분과(김원동·류방란 위원), 숙의분과(이희진·유태경·이성재 위원), 법률분과(김지형 위원장·김정인 위원) 등 4개 분과를 두기로 의결했다.

조사분과는 조사 설계, 설문조사 등을 기획·운영하고, 소통분과는 국민과의 소통 촉진을 담당한다. 숙의분과는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 과정 기획을 전담하고, 법률분과는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담당한다. ⑥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 전력수급 문제 없고 전기요금 현재 수준 유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정부가 탈원전에 시동을 걸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해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채워갈 방침이다.

탈원전은 단계적 진행이다. 가동 중인 원전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는 늘려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완전한 원전 제로를 이루는 데 약 6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동 원전을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6기, 2040년 12기로 줄이고, 2079년 비로소 원전 제로를 이루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차질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점진적 탈원전 로드맵을 설정하고 명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 국민의 혼선을 줄이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직접 설명했다.

Q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 기조는 탈원전,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600여 차례가 넘는 지진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탈원전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민적 호응도 높았다.

방사성폐기물 비용, 환경 비용, 사고위험 비용, 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경제적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의 정부기관은 2020년대부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의 발전 비중은 지난 1996년 17%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독일, 스위스 등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거나 원전을 감축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1979년 이후 원전 건설이 없다가 2008년에 처음으로 4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던 미국도 경제성 문제로 지난달 2기의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기술 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전

되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나 원자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도 넓어졌다. 이제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에너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Q 에너지정책 중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에 관심이 많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너무 급격한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사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급격한 중단(Shutdown)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서히 원전을 감축(Phase-out)해나가려는 것이다.

당장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원전이 오히려 3기가 늘게 되며, 그 이후에도 60년 이상 원전이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에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은 모두 수명이 60년이기 때문에 2079년이 돼야 원전은 제로가 된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규로 계획돼 있는 6기의 원전은 건설을 백지화하고, 수명이 다된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당초 공약은 건설 중단이었지만, 공론화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Q 전기요금 상승, 전력수급 차질 등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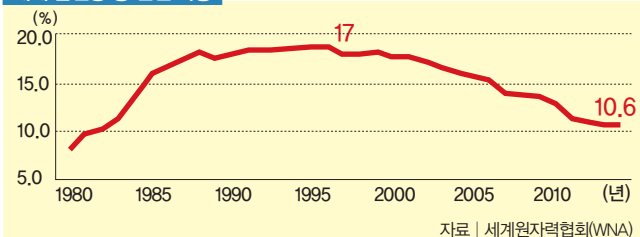
결론부터 전하자면 전력수급과 요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총 20.7GW의 원전 설비용량이 줄어든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입력전제와 국제적으로 검증된 여러 가지 예측모형을 사용해 도출한 전력수요는 기존 계획보다 2030년 기준 11.3GW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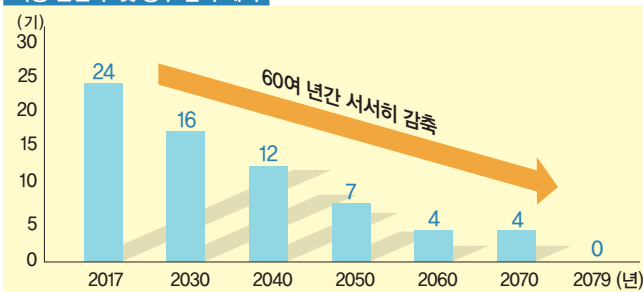
따라서 2030년에 10GW 정도 설비가 더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10년 이상 남아 있고, 정책적 노력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확대한다면 2025년 이후에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어 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2022년 이후에도 재생 발전 단가 하락, 수요관리, 첨단 ICT 기술 적용 등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도 커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에 관한 문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세계 발전량 중 원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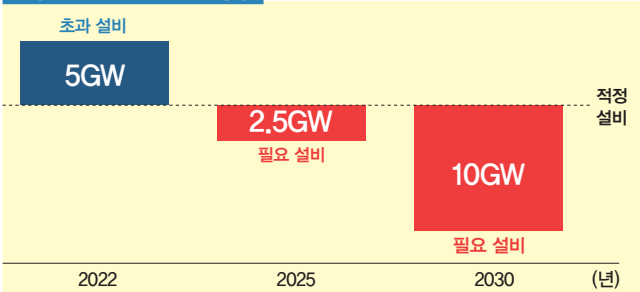


가동 원전 수 및 향후 감축 계획



• 공론화 과정에 있는 신고리5·6호기를 제외하고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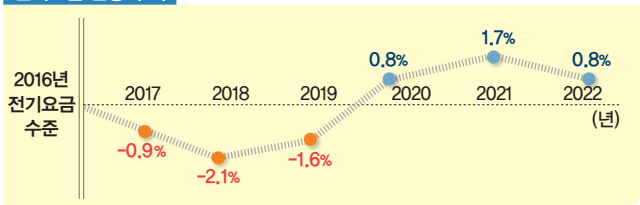
적정 설비 대비 발전 설비 용량



• 2025년까지 설비 예비율 19.5% 이상 유지

• 2030년까지 신재생 설비 용량 59.7GW로 확대(실효용량 기준 8.4GW)

전기요금 전망 추이



Q 탈원전으로 원전산업계와 인근 지역주민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앞으로 60년 이상 원전이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원전 설비 운영, 안전관리 등 원전산업계의 역할은 계속 유지된다.

전 세계적으로 수명주기를 다한 원전이 점점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과 인력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44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영구 정지됐다.

아울러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 기간 중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안전 강화, 방사능 차단기술 등 안전운영 기술과 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원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간에 쌓였던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인 만큼,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해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가치이며, 대다수 국민도 공감하는 대전제다.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

전수현 | 위클리공감 기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 전력수급 문제 없고 전기요금 현재 수준 유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정부가 탈원전에 시동을 걸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해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채워갈 방침이다.

탈원전은 단계적 진행이다. 가동 중인 원전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는 늘려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완전한 원전 제로를 이루는 데 약 6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동 원전을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6기, 2040년 12기로 줄이고, 2079년 비로소 원전 제로를 이루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차질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점진적 탈원전 로드맵을 설정하고 명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 국민의 혼선을 줄이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직접 설명했다.

Q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 기조는 탈원전,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600여 차례가 넘는 지진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탈원전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민적 호응도 높았다.

방사성폐기물 비용, 환경 비용, 사고위험 비용, 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경제적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의 정부기관은 2020년대부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의 발전 비중은 지난 1996년 17%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독일, 스위스 등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거나 원전을 감축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1979년 이후 원전 건설이 없다가 2008년에 처음으로 4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던 미국도 경제성 문제로 지난달 2기의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기술 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전

되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나 원자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도 넓어졌다. 이제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에너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Q 에너지정책 중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에 관심이 많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너무 급격한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사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급격한 중단(Shutdown)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서히 원전을 감축(Phase-out)해나가려는 것이다.

당장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원전이 오히려 3기가 늘게 되며, 그 이후에도 60년 이상 원전이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에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은 모두 수명이 60년이기 때문에 2079년이 돼야 원전은 제로가 된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규로 계획돼 있는 6기의 원전은 건설을 백지화하고, 수명이 다된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당초 공약은 건설 중단이었지만, 공론화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Q 전기요금 상승, 전력수급 차질 등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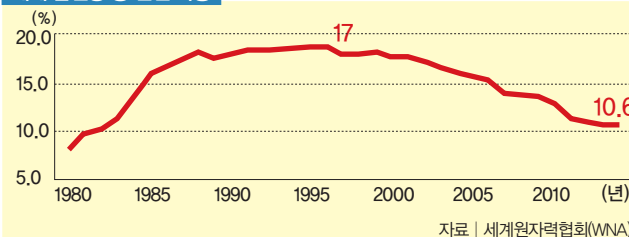
결론부터 전하자면 전력수급과 요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총 20.7GW의 원전 설비용량이 줄어든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입력전제와 국제적으로 검증된 여러 가지 예측모형을 사용해 도출한 전력수요는 기존 계획보다 2030년 기준 11.3GW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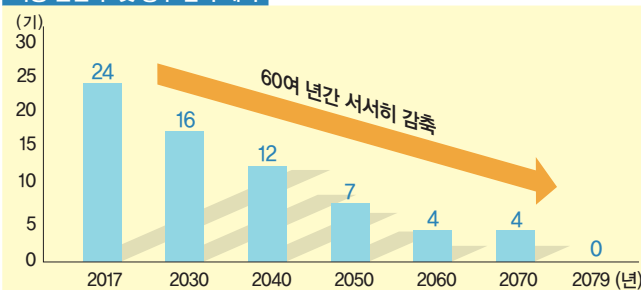
따라서 2030년에 10GW 정도 설비가 더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10년 이상 남아 있고, 정책적 노력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확대한다면 2025년 이후에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어 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2022년 이후에도 재생 발전 단가 하락, 수요관리, 첨단 ICT 기술 적용 등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도 커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에 관한 문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세계 발전량 중 원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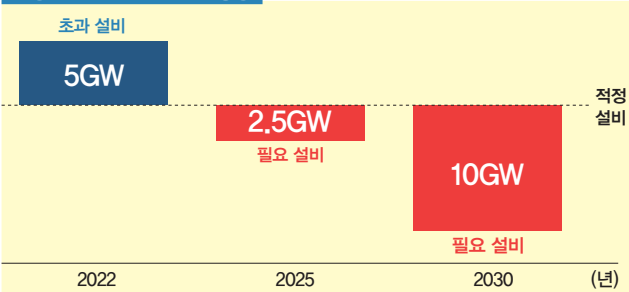


가동 원전 수 및 향후 감축 계획



• 공론화 과정에 있는 신고리5·6호기를 제외하고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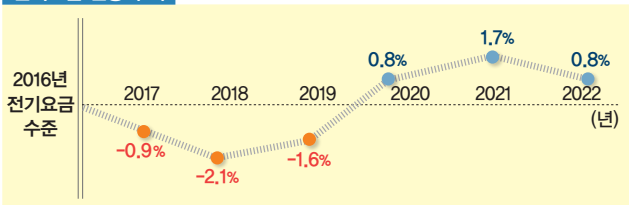
적정 설비 대비 발전 설비 용량



• 2025년까지 설비 예비율 19.5% 이상 유지

• 2030년까지 신재생 설비 용량 59.7GW로 확대(실효용량 기준 8.4GW)

전기요금 전망 추이



Q 탈원전으로 원전산업계와 인근 지역주민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앞으로 60년 이상 원전이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원전 설비 운영, 안전관리 등 원전산업계의 역할은 계속 유지된다.

전 세계적으로 수명주기를 다한 원전이 점점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과 인력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44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영구 정지됐다.

아울러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 기간 중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안전 강화, 방사능 차단기술 등 안전운영 기술과 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원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간에 쌓였던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인 만큼,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해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가치이며, 대다수 국민도 공감하는 대전제다.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㉔

전수현 | 위클리공감 기자

그린피스 에너지 캠페이너 켄드라 올리히 씨 방한 토론 “원전산업은 수십 년 전부터 하향세였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원전산업은 하향세에 있었으며 사고 이후 그 추세가 가속화됐다.”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 켄드라 올리히 씨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 동향’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동국대 김익중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켄드라 올리히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와 동국대 박종운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경북대 김종달 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고려대 김수진 교수,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산업정책관이 참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 전문가인 줄리아 소콜리초바 씨는 “국민 요구로 세계적인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에 함께하기로 한 한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리히 캠페이너는 수십 년 전부터 원전산업이 하향세에 있었다는 근거로 원자로 폐로 건수를 들었다. 1991~2000년 사이 원자로 폐로 건수는 52건으로 신규 가동 건수 30건을 훨씬 앞섰고 2001~2010년 사이 폐로와 신규 가동 건수는 각 32건으로 동일했다. 원전이 줄어드는 원인은 예산 대비 건설비용의 증가로 파악했다. 다만 최근 들어 원전이 다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주도적 현상일 뿐이며 중국마저도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이 훨씬 큼을 강조했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탈원전을 하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올리히 캠페이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다.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이 원전 가동을 완전히 멈춘 2013년 9월에서 2015년 8월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 그린피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 14억 8000만 톤에서 2014년 13억 6500만 톤으로 감소했다. 그는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원인을 에너지 소비 절약,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2013년 기준 세계 경제대국 중 중국, 독일,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이 원자력보다 컸다. 또 재생에너지 투자는 23% 하락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가격의 하락에 따른 결과이며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의 2배, 원자력 투자의 7배 이상이다.

아울러 일본의 일부 원전이 재가동되고 있지만 원자력이 에너지원에서 큰 비율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율이 20~22%를 차지할 것이라ں 추정치를 제시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일본은 원전 재가동 관련 기술적, 법적 어려움과 국민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2030년 일본 원전 비중은 2~7%”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전 기술만큼 국가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도 없다. 이런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또 원자력이 시장에서의 지위를 잃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리히 캠페이너는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경영난에 빠진 사례를 들었다. 도시바-웨스팅하우스는 한때 ‘우리가 원자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빠른 원전 건설을 자부했지만 초과비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서 철수를 결정하며 파산보호신청까지 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일본도 참고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올리히 캠페이너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 동향’ 정책토론회 참석차 방한한 켄드라 올리히 그린피스 에너지 캠페이너

올 여름엔 Cool 쿨맵시로 쿨해지자!

쿨맵시로 체감온도↓ 실내온도↑

쿨맵시란?

최고의 패션 트렌드

시원하고 멋스러운 의미의 '쿨'(Cool)과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의 합성어로 시원하고 편하면서도 예절과 맵시를 갖춘 옷차림을 말합니다.

쿨맵시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쿨맵시로 쿨하게 입는 법!

넥타이는 생략
첫 단추는 풀기

소매 통이 넓은 반팔 셔츠

밝은 색채의 면 소재 바지

넉넉하고 시원한 상의
면·마·혼방소재

밑단 폭이 넓어
통기성이 좋은 스커트

가벼운 면 소재의 하의



환경을 위한 쿨맵시

쿨맵시를 실천하여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면 냉방비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쿨맵시

쿨맵시는 체열과 땀을 쉽게 배출하여 체감온도를 2℃ 낮춰줍니다. 또한, 냉방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쿨맵시

가볍고 얇은 옷감과 밝은 계통의 쿨맵시는 착용자뿐만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환경부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Korea Climate & Environment Network

에너지 세대교체 시작됐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현재 1~2%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원자력, 석탄, 석유의 비율은 줄어든 예정이다. 2016년 말 기준 30.0%, 38.7%였던 원자력, 석탄 발전 비율을 2030년 각각 18%, 25%로 줄이고 4.7%(폐기물 포함)였던 재생에너지는 20%까지 확대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수차례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 18~19세기 석탄 중심의 산업혁명은 20세기에 들어서며 석유 중심으로 변화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에너지원이 다양해졌다. 석탄과 석유 중심의 발전이 주를 이루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등장했다. 원자력은 고효율을 자랑하며 재생에너지보다 앞서 나갔다. 재생에너지는 미미하게 발전을 이어가다 1972년 석유 파동 당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거론됐다. 최근에는 신기후체제(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들어 재생에너지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재생에너지와 궤를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 비경제적인 에너지로 인식됐던 재생에너지가 유망한 에너지로 재평가받고 있다. 기술력이 향상해 발전단가가 하락한 것. 전문가들은 향후 20~30년 내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석탄(화력)보다 저렴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생에너지가 발전의 주역이 된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지향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탈원전·탈석탄 시대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1조 6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총 12개 분야로, 기존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햇빛·물·지열·강수 등을 포함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재생에너지로 나뉜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산유 등 3개 분야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수열 등 9개 분야로, 이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정에너지는 엄밀히 말해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가 아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 지원,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가 실생활과 밀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원자력에너지의 비율은 점차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높여간다. 대한민국은 지금 에너지 세대교체 중이다.

전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로 확대 원전·석탄 중심에서 재생·분산전원 체제로 전환

정부의 에너지 세대교체 의지는 확고하다. '탈원전'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에너지 정책을 살펴봤다.



이미지출처

오늘날 국제사회는 저성장 경기 지속, 신흥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및 산업화 개발 가속화, 저유가 현상 등으로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 등에 국력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의 다각화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육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시점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상업화됨에 따라 1997년 들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등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2004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됐고, 2008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2014년에는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 전략 로드맵도 수립했다.

그러나 저유가와 경기 둔화로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는 예상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투자 규모로 볼 때 풍력과 태양광에너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 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산업은 침체기였던 2012~2014년을 지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2016년에 이르러 37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풍력발전 산업은 2016년 1GW(기가와트) 규모에 접근했으나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이 축소·폐지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량 저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한편,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개된 바와 같이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원전 안전규제체계의 혁신으로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

서울 홍릉동부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미니발전기. 홍릉동부아파트 총 371세대 중 357세대가 태양광 미니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로드맵을 통한 단계적 원전제로 시대로 이행'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공급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분산형 전원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원자력 및 석탄 발전 중심의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

앞서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고리 원자력발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고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왔다.

정부가 조만간 마련할 '탈원전 로드맵'에서는 원전 신규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소속 위원들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도 상향 조정하고 원전 안전관리 체제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재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원전과 석탄 발전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 활용 방안은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 방안으로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분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여건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책을 마련,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확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친환경 스마트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물인터넷(IoE) 기반 신비즈니스도 만들어낼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 수요관리 강화 정책과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신환경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전력발전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동시에 사업장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신규 건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신기후체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전담 부서를 재조정하고, 배출권 할당 계획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는 등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배출권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장기현 | 위클리공감 기자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재생에너지

서울 홍릉동부아파트

서울 홍릉동부아파트는 총 371세대 중 357세대가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에서 지원금을 보조받고 차액은 아파트 수익사업 잉여금으로 충당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세대는 월평균 1만 3000가량 전기요금이 절약됐다. 이용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지자체의 정책으로 우리 아파트가 에너지 자립을 하는 데 성공했다"며 "앞으로는 각 세대뿐 아니라 경로당, 아파트 상가 등에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 하늘공원

과거에 쓰레기 매립지였던 서울 마포 난지도에 공원이 들어섰다. 하늘공원으로 명칭이 바뀐 난지도에는 친환경의 상징인 풍력발전기가 세워졌다. 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풍력발전기는 설치와 동시에 하늘공원을 상징하는 명물이 됐다. 하늘공원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최대 10kW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최강용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인은 "하늘공원에 있는 풍력발전기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은 미미하지만 서울 도심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탈원전·탈석탄 흐름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재생에너지 투자 2860억 달러, 146개국 정책 마련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다. 탈원전·탈석탄을 표방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는 데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의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다. 각국은 다양한 지원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큼 안전한 대체 에너지를 찾지 못한 까닭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동기는 깨끗함이다. 전 세계 195개국은 2015년 신기후체제(파리기후 변화협약)에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의 기온을 2℃ 낮추기로 약속한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개도국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인류가 찾아낸 답이 지속 가능한 개발, 즉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의 한계였던 경제성도 개선되고 있다. 이 무한한 에너지원은 어느 국가나 갖고 있는 자원으로, 고갈될 우려도 없다.

재생에너지 증가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73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146개국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대부분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유·석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20년 동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을 봤을 때 향후 10년, 20년의 발전 속도는 산술급수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2860억 달러(약 323조 60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세계 발전용량의 28.9%, 전력 생산의 23.7%를 차지했다. 수력을 포

함하면 총 1849GW로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수치다. 덴마크의 전력 수요 중 42%가 재생에너지이며, 우루과이 15.5%, 독일은 4개 주에서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다. 탈원전의 길을 가고 있는 이탈리아 전력 수요의 7.8%는 태양광을 통해 이뤄졌다.

재생에너지가 새로 보급되는 비율도 눈에 띈다.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용량은 약 60%를 차지했다. 각국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재생에너지 투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풍력, 태양광 등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015년에는 세계적으로 매일 5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을 정도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2016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총 830만 개에 이른다. 전년의 810만 개에서 20만 개 증가한 규모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개선이다.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로 지적됐으나 기술 발전이 성과를 보이면서 경제성이 보완돼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 판도가 바뀐 기점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기후협약도 출을 목표로 2009년 개최된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코펜하겐 회의 이후 6년 만에 태양광 시스템 발전 비용이 70% 하락하고 풍력은 기존 발전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 물론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 따라 기술별 발전단계는 큰 편차를 보인다.

세계 에너지 정책의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루판 시 인근의 풍력발전소 | 연합뉴스

증가하는 것은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발전 부문에서는 2040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가 53%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분석 기관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FF)에서 내놓은 <새로운 에너지 전망>을 보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저탄소 에너지원)가 세계 발전설비 총용량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30년경 상당수의 국가에서 태양광은 가장 저렴한 발전 기술이 돼 세계 전력의 15%까지 공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하락하는 동안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단가도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 큰 차이가 없는 한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의 선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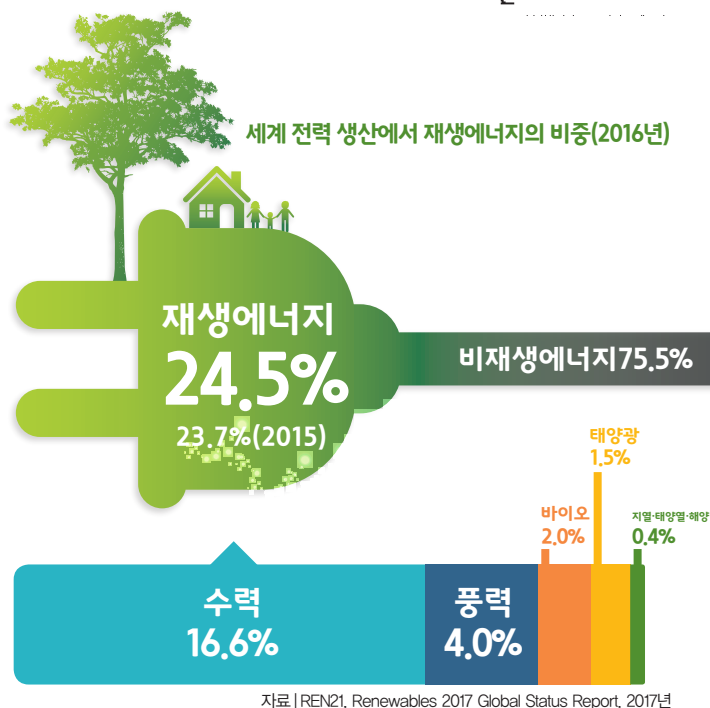
독일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

독일의 재생에너지산업 발단은 체르노빌 원전사고다. 원자력이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목격하며 독일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에너지 전환'을 기치로 우라늄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과 번영을 논의했다. 독일은 1990년 '1000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기술별 규모와 입지에 따른 발전원가를 구상했다.

2009년 독일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0~95%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노렸다. 재생에너지를 친환경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정책 기조를 세운 것이다. 독일 에너지 전환의 핵심 목표는 2022년까지 원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다.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50%, 2040년 60%, 2050년 80%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은 '재생에너지법'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는 5MW 이하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기준가격을 부여하는 기준가격 의무구매제(FTT) 적용과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보장이 포함된다. 또 재생에너지 운용비용이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금 형태로 더해졌다. 이러한 독일의 정책은 자국의 재생에너지 성장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의 비용은 규모의 경제, 세계적인 경쟁, 기준가격 하락의 압력 등으로 감소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선도 국가로서 기준을 정한 셈이다.

독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단행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태양광에 대한 보조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태양광 전력망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 저장에 대해 3000만 유로의 지원을 시작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답게 그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은 12.5%다. 가장 큰 에너지원은 석유 34.4%이고 석탄 24.4%, 천연가스 20.9%, 원자력 6.5%, 수력 1.4%가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석탄화력의 비율을 점차 줄여간다는 방침은 흔들림이 없다.

미국 2029년 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 앞설 것

넓은 영토만큼 자원도 많은 미국. 가장 큰 에너지원은 단연 석유(37.3%)와 천연가스(31.3%)다(1차 에너지 소비). 미국은 최근 석탄의 비중을 눈에 띄게 줄인 반면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의 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총발전량 중 가스화력의 비중이 석탄화력을 넘어서게 될 것이며, 2029년 풍력과 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의 비중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제도의

근간으로 삼았다. 미국은 30여 개의 주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의무할당제를 시행해 설비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는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50%를, 하와이 주는 2045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 주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2001년 2%에서 2016년 16%로 성장한 것. 오리건 주는 미국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로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중국

한 시간에 두 개씩 풍력발전 건설, 10년 사이 70% 증충

G2 반열에 올라선 경제대국 중국은 재생에너지 투자에도 무서운 속도로 열을 올리고 있다. 매 시간 두 개의 풍력발전이 세워지고 있을 정도다. 중국은 대기오염 저감, 기후변화 대응,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원전 건설의 1/3을 주도하는 거대 원전국이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 투자 1위국이기도 하다. 그 결과 중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5년 대비 약 70% 증가했다. 이는 중국 역시 대기오염 완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의 비중을 줄여가며 다른 에너지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6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뛰어 들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수립부터다. 중국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했다. 2015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2020년까지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중국 정부가 밝힌 보급 목표는 풍력 200GW, 태양광 100GW, 수력 350GW였다. 실제 성과는 풍력 145GW, 태양광 43GW, 수력 321GW로 태양광을 제외하고는 근사치를 달성했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

재생에너지 2030년 22~24% 확대

일본은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했다. 1974년 대체에너지 개발, 석유 의존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선샤인 계획'을 발표했다. 1980년대에는 신에너지개발기구(NEDO)를 발족하고 1997년 '신에너지법'을 제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대부분의 원전이 가동을 멈췄다. 갑

작스러운 원전 중단으로 일본은 석탄화력에 의지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수력 54.6%, 태양광 37.0%, 바이오매스 4.5% 등이며 상대적으로 풍력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기준가격 의무구매제의 영향이 큰데, 일본은 태양광의 기준가격을 높게 설정한 탓에 태양광 발전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기준가격 의무구매제를 전면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중이다.

2016년 일본은 '에너지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2~24%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국제적 책무를 다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영국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영국의 주요 에너지원(1차 에너지 소비)은 석유(37.4%)다. 하지만 재생에너지(9.1%)의 비중이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 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중심이다. 해상풍력이 빠르게 증가해 영국의 풍력 용량은 13.9GW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41.8%를 차지한다. 그다음에 태양광 9.1GW(27.4%), 바이오매스 5.7GW(17.2%), 수력 4.5GW(13.5%) 순이다.

영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석유·석탄 발전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있다. 2008년 영국은 '기후변화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석유·석탄 발전시설은 추가로 건립할 수 없게 됐다. 상대적으로 대체에너지 경쟁력은 강화됐다. 그중에서도 저탄소 기술로 시장 침투력이 우수한 재생에너지가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1년 '국가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에너지 수요의 1.3%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9.1%로 급상승했을 정도다. 여기에는 2002년 도입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혁혁한 공헌을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2002년 1.8%에서 2014년 19.1%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두드러진 정책은 재생에너지 열 인센티브(RHI) 제도다. 이는 영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를 강제하기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영국 내에서 보조금 비율이 잘못 설정돼 기업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RHI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원전 강국에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프랑스는 세계 2위의 원전 국가다. 프랑스의 발전 비중은 원자력이 70% 이상, 재생에너지는 2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던 프랑스가 원전 감축을 선언한 이상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2007년 '환경법'을 제정한 프랑스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3%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또 2015년 원전 축소 및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탄소시장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4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32%로 확대, 화석연료 사용 2030년까지 30% 축소, 2025년까지 원전 비중 50% 이내로 축소 등의 세부 목표를 명시했다. 프랑스 역시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2014년부터 100kW 이하 태양광에 기준가격 의무할당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탈리아

재생에너지 목표치 조기 달성

EU는 회원 국가별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정했다. 이탈리아는 일찌감치 그 목표치를 달성했다. 30년 전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답게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왔다. 이탈리아는 세계 여섯 번째 재생에너지 발전국이다.

이탈리아는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높다. 전체 전력 수요 중 태양광이 8%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그 성장세가 다소 정체 상태인데,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 중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은 지열발전이다. 지열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초기 투자비가 커서 자본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발전도 더딘데 이탈리아는 미국과 함께 손꼽히는 지열발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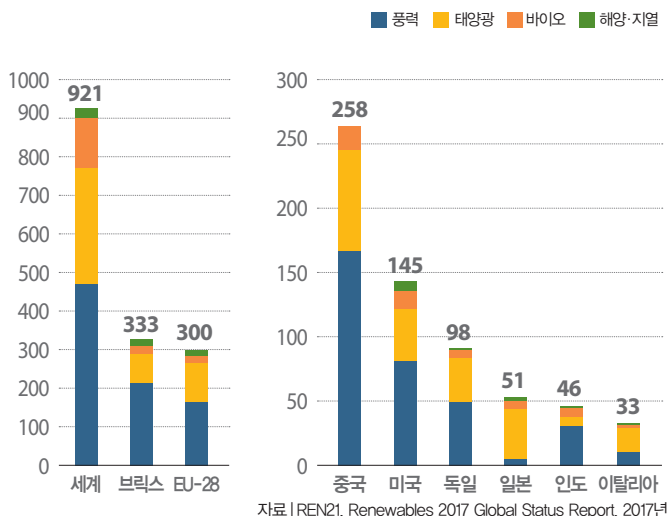
인도

떠오르는 태양광 신흥 강국

인도는 재생에너지 신흥 강국이다. 인도는 2016년 약 46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22년까지 총 175GW 증설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태양광 100GW, 풍력 60GW, 바이오매스 10GW, 소수력 5GW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세계 재생에너지(수력제외) 발전 설비 (2016년) (단위:GW)



제도적 지원이 강화됐다. 2016년 태양광이 전년 대비 95% 성장했을 정도다. 태양광 설비 부품 가격이 계속 하락함으로써 추진 여건이 조성된 덕분이다. 이처럼 정부가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연간 8~10GW의 태양광 설비를 건설할 계획인 인도는 머지않아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태양광 설비 보유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 해외 자본 유치 나서다

2015년 출범한 새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 재생에너지원 발전량 증대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을 20%로 증대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법을 마련했다. 이 법은 일종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2018년부터 일정 용량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개별 발전량의 8%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생에너지법에 기초해 사용 의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국 자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자국 뿐 아니라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의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여주 수도권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경북 영양권에 전국 최대 풍력단지 조성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 3020 이행계획'에는 안전한 대한민국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다.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전 세계 석유가스 분야 고용이 둔화된 것과 대조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1600만 개 증가해 약 2440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청신호가 켜졌다. 재생에너지 전력량이 확대되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도 함께 발전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생에너지(폐기물 포함)로 대표되는 차세대 에너지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40만 개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산업 분야에 각각 4만 8000여 개,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등 기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1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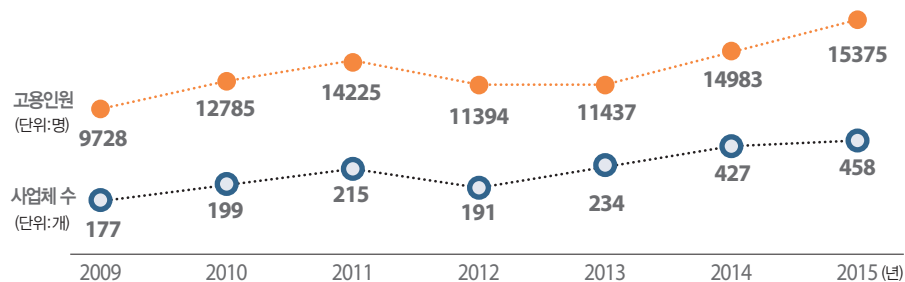
현재 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포털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재생에너지산업 종사자수는 1만 명에서 2015년 1만 6177명으로 증가했다. 6년 사이 62%의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에너지원별 고용인원은 태양광 분야가 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풍력(15%), 폐기물(12%), 바이오(9%)가 뒤를 이었다.

조선DB



2015년 3월 23일 서울 롯데마트 구로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장치를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전국 39개 점포 옥상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운영해 작년 전력량 451만kwh를 생산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인원 및 사업체 현황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열, 수력, 바이오, 폐기물)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재생에너지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설계해 생산하고 시공을 마친 후 안전관리와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전문화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에서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량이 20%까지 확대되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전체 전력량의 4.7%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사업 규모가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발표한 <2016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력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지열, 바이오,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1000개 기업에서 평균 8명 정도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 인원 비중은 생산 및 제조 부문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공(15.4%), 연구개발(13.3%)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채용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해양 업종은 시공 부문을, 풍력, 바이오, 폐기물 업종은 생산 및 제조 부문을, 수력 업종은 설계 부문에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일자리 꾸준히 증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창업교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창업스쿨반'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스쿨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절차 및 전력시장에 대한 이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제도 및 정보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강현순 전력거래소 기획처 KPX교육센터 과장은 "2016년 시행한 재생에너지 창업스쿨반에 참가한 534명이 수업 내용에 평균 91.6점의 만족도를 보였다"며 "앞으로 수업 참가자들이 재생에너지 관련 창업에 성공적으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내실 있게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 조성될 재생에너지 단지는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 경기 여주시는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유희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주시에 들어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수도권 최대 태양광 융복합 발전단지로 개발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는 국내 최초로 발전설비 유희전력을 활용한 재생 테마파크도 함께 짓는다. 여주시는 재생 테마파크를 여주의 대표 관광지인 신록사, 세종대왕릉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해 발전 수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 최대의 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영양은 산지마다 편서풍이 잦고 바람이 부는 횟수가 많고 그 강도도 센 편이다. 전문가들은 영양이 전국에서 풍력발전을 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영양에는 이미 2008년부터 석보면 맹동산에 1.5MW(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41기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영양읍 무창리에 18기를 추가로 세웠다. 영양 지역에 설치된 59기의 풍력발전기는 120.9MW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6만 5000가구가 쓰는 전력과 맞먹는다. 영양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 기업인 GSE&R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6000억 원을 들여 3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한국남동발전은 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남동발전은 전남 신안 등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김해·해남 등에는 대규모 부지 100만 평 이상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남동발전은 재생에너지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장기현 | 위클리공감 기자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지역별 추진 사업 계획

- 강원 춘천 지역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충북 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 경북 동해안 친환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전남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산업 추진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에너지 자립 현장을 가다

재생에너지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신한 곳이 많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를 실천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부터 농촌에 있는 전원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다양하다.
에너지 자립은 물론 부가수익도 창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현장을 소개한다.



충남 아산 예꽃재마을의 32가구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지열보일러로 물을 데워 난방과 온수를 해결한다. 예꽃재마을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덕에 에너지 자립률 80%를 달성했다. IC영상미디어

충남 아산 예꽃재

“재생에너지로 기본 전기요금만 내요”

예꽃재마을에 사는 권씨는 씨는 자칭 ‘귀차니스트’다.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등 온갖 가전제품을 구비했다. 예꽃재마을 32가구 중 가전제품이 제일 많고 전기요금도 가장 많이 내는 권씨의 한 달 전기료는 3040원 정도.

“예꽃재 가구들 대부분이 기본 전기료만 내고 있어요. 한 달에 평균 1600원 정도 내는 가구가 대부분이다 보니 예꽃재에서는 전기료가 2000원만 넘어가도 많이 내는 편이죠.”

공이 몇 개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저렴한 전기료의 비결은 따로 있다. 귀촌마을인 예꽃재는 마을을 조성할 때부터 모든 집을 정남향으로 설계했다. 그리고 단열과 방음 효과가 뛰어난 3중창을 사용해 기밀성을 높였다. 여기까지는 전국 어느 주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쓰는 것이 주효했다.

예꽃재는 에너지 자립마을 1호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하다.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의 지붕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한낮에 뜨

거운 태양에너지를 머금은 태양광 패널은 시간당 3kW의 전기를 생산한다. 보일러실에는 가스보일러 대신에 세대당 17.5kW를 생산하는 지열보일러가 자리하고 있다. 지열은 토양, 암반, 지하수가 가진 열 에너지를 뜻한다. 지열에너지는 날씨나 기후 조건과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예꽃재는 태양광발전기와 지열보일러로 생산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LPG 가스통도 도시가스 배관도 없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쓰는 예꽃재는 에너지 자립비율이 80~90%에 달한다.

여름에는 어떨까.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종일 집에 있어서 에어컨을 끌 수 없는 집이 대다수다. 예꽃재 주민들은 에어컨을 종일 틀다 해도 전기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작년 여름 에어컨 두 대를 가동한 집에서는 그 달 전기료가 8000원 나왔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집이라면 좀체 받아보기 힘든 액수다. 하지만 이 가격도 예꽃재 안에서는 ‘전기료 폭탄’을 맞은 수준이다.

겨울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권씨는 원하는 만큼 난방을 하고 온수를 쓴다. 그런데도 한 달 난방비는 20만 원 정도.

이들이 태양광발전설비와 지열보일러 설치가 가능했던 데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의 지원이 컸다. 예꽃재 주민들은 효율이 높고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의 에너지를 선택해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 모니터링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꽃재의 경우 마을 커뮤니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가산점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비 50%를 지원했고 아산시청에서 25%를 부담했다. 주민들은 설치비의 남은 25%를 부담해 저렴한 가격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권씨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도 돈 절약하고 자연도 보호하는 예꽃재의 사례를 보고 많은 마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영상미디어 1



충청남도 2

충남 홍성 죽도

"태양빛과 바람,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지"

충남 홍성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달리면 약 30가구 주민들이 모여 사는 죽도가 있다. 집집마다 예쁜 벽화가 인상적인 죽도에 2015년 큰 변화가 생겼다. 죽도를 탄소 배출이 없는 섬, 깨끗한 친환경에너지가 가득한 섬으로 바꾸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디젤발전소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다. 그중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디젤발전소에서 나오는 심각한 소음 공해였다. 에너지 효율도 문제였다. 디젤발전소는 마을에 설치한 가로등이 깜박일 만큼 전기 생산량이 고르지 않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디젤발전기를 돌리는 원료인 석유였다. 육지에서 배를 통해 기름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돼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조개 양식장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양식장이 기름으로 오염되자 죽도 주민들은 디젤발전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죽도가 에너지 자립섬으로 재탄생하는 데 지자체와 한화S&C를 필두로 한 10여 개 기업이 발 벗고 나섰다. 한화S&C가 사업비의



하동군 3

1 예꽃재마을에 설치된 지열보일러.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데워 난방과 온수에 쓴다. 2 충남 홍성 죽도에 설치된 발전용량 200kW 태양광발전기 3 경남 하동군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

60%, 한국에너지공단이 30%, 충청남도가 10%를 지원했다. 죽도에 설치된 에너지설비의 발전용량은 태양광발전기는 200kW, 풍력발전 10kW 규모다.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해 야간 전력공급 문제도 해결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후 죽도는 서해안에서 최초로 에너지 자립에 성공한 섬이 됐다. 현재 죽도의 에너지 자립률은 약 75% 정도. 이성준 이장은 "디젤발전소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사라졌다"며 "이제 전기도 고르게 나오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섬이라는 특이점을 보고 관광을 오는 사람이 많아져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군

"재생에너지로 수익 창출 효과"

2004년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생에너지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부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낳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 경남 하동군이 대표적이다. 하동군은 지난 2010년 정부의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에 따라 군청사와 지리산생태과학관, 청소년수련원 등 공공청사 15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했다. 하동군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전력량은 연간 38만 3005kW에 이른다. 보건소, 공설운동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 부지 7곳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임대해 연간 18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자체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2016년 한 해에만 69만 건을 올렸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하위를 기록했던 하동의 놀라운 발전이다. 임채신 하동군 재생에너지계장은 "태양광발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할 뿐 아니라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 내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에너지 전환의 골든타임을 잡자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원전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혀 관련 분야의 논의가 뜨겁다. 원자력 학계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법적으로 정부 정책에 접근하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원자력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면을 살펴보고 국가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원전 사고는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원전은 결코 대체에너지가 될 수 없다. 벌써 50여 년간 전 세계가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연구해왔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원전은 사용 후 방사능이 없어지는 데 10만 년이 걸린다. 현재는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기술을 연구 중인데 수십 년간 별 진척이 없다는 게 문제다. 채처리도 쉽지 않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누구도 내가 사는 곳에 핵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배출되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

또 다른 논점은 발전단가다.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형 원전국가들은 원자력이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의·타의로 탈원전에 나서고 있다.

원자력 비중 70%의 프랑스마저 원전 감축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 원전 2위 보유국인 만큼 세계 원전 확대에 이바지했다. 그러던 프랑스가 원전을 포기한 속사정은 경제적 측면에 있다. 프랑스는 노후 원전 17기 정도를 수명 연장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원전 건설비용이 5조 원이라고 할 때 프랑스의 노후 원전 수리비용은 약 2조 원이 든다. 안전기준을 강화할수록 수리비용은 증가한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수십 조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비용은 프랑스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 유럽 국가들이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지·보수비용에 크게 투자하는 것과 상반된다. 안전성을 일부 외면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오해한 측면도 여기서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앞서 거론한 사용후핵연료 비용까지 합쳐지면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들보다 비싸진다.

일각에서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기술 경쟁력을 잃고 수출시장도 좁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과 수출시장에는 착시효과가 존재한다. 원전 기술은 이미 평준화를 향해 가고 있다. 10년 만에 중국이 세계 원전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다. 중국의 원전 종사 인력은 우리나라의 일곱 배에 이른다. 기술도 뒤지지 않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 중인 원전 건설도 중국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물론 중국의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원전을 1기 또는 2기를 건설하는데 이럴 경우 원전을 보조해주는 전력이 부족해 가동이 어렵다. 혹자는 원전 수출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중국, 러시아, 인도다. 이들 나라는 자국 기술로 원전을 짓는데 우리가 진출할 원전 시장이

어디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원전 수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건설 중단에 따라 전문 인력이 없어질 거란 시각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스리마일 원전사고 후 30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재개 후 인력 부족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건설비 상승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인력 보존을 위해 건설을 유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오히려 인력의 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책이 보완되는 것이 맞다.

재생에너지 활용에서 눈에 띄는 사례가 있다. 중국 한 지역에서 1주일 동안 100% 재생에너지만 공급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한 개 '도' 정도 크기의 인구는 800만 명가량 된다. 독일도 재생에너지를 4시간 동안 85% 공급한 적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담보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그 비율이 1~2% 내외로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 세계 여섯 번째의 원전대국이 된 데에도 정부의 아낌없는 투자가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면
 지금보다 훨씬 월등한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

있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성장할 수 없는 구조였다. 투자 역시 부진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00개 설치된 것과 우리나라 상황은 심히 대조적이다.

에너지 정책이 정부 중심으로 이뤄진 이유도 있다. 전력수급 계획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향이 있다. 당장의 건설 비용이 저렴하다고 원전을 이용해 전력 과잉생산을 해왔다. 가스로 개발해야 하는 피크 전력도 비싸다는 이유로 원전을 이용했다. 평상시 예비율이 30%가 넘었음에도 전력을 낭비해 생산했다. 선공개가 된 8차 수급 계획에 저성장 비율을 반영한 것도 적정생산을 위해서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이 맞물려 지금의 원전 발전이 가능했다. 이제 재생에너지 차례다. 연구 개발과 보급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개발비에 비해 보급 지원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는 500MW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대형사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발전사업자에게로 확대한다면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집열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며 재생에너지의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비용 조달은 원전 투자비용에서 찾으면 된다. 10기의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50조 원을 재생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에 가속화가 붙지 않을까.

정부의 원전 지원, 재생에너지로 돌려보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2030년까지 원전 10% 감소를 공언했다. 원전 10% 감소는 가정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다. 가정에서 5%씩 절약하고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을 5%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고 영업하는 매장에 벌금을 부과하기보다 전기요금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 원전을 줄일 수 있는 힘은 국민의 협조에 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의 목표가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100% 발전을 달성하는 게 아니다. 수십 년의 과도기를 둘 것이다. 정부의 계획도 2030년까



2006년 대관령삼양목장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 대관령 일대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해발 900m 이상의 고산 지대이자 바람이 많고 서남풍이 초속 6~7m로 일정하게 불어 풍력발전단지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았다.

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데에 있다. 완전한 탈원전은 2070년대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원전을 감소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해가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저장기술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 되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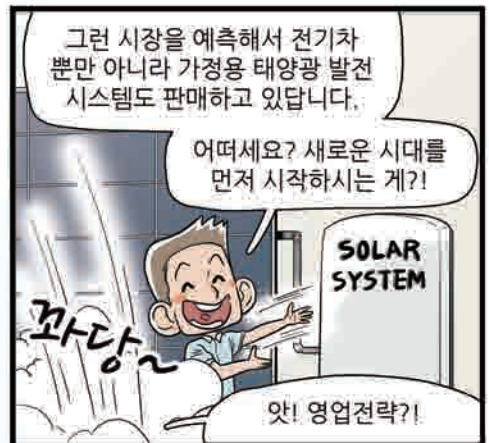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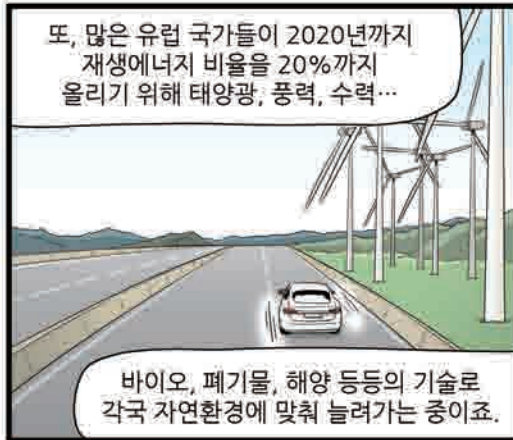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20%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1.5%의 성장이 필요하다. 1년에 4GW씩 생산을 늘려야 하는 셈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주축인 수력발전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또는 다른 국가의 수력발전 비중만큼 일정 기간 원자력이나 천연가스(LNG)와 공존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에너지 정책의 전복이 아니다. 변화 과정을 통한 전환이다. 2030년까지 변화는 가능하다. 다른 국가들보다 시작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할 과정이다. 어쩌면 지금이 에너지 전환의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



박종운 |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저성장 국면 해소 방침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 주체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기조로 정부 차원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재정 효율성도 제고한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 상생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사업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22년까지 3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를 개선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강화된다.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한다. 방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을 2021년까지 확충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에 청년고용의무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이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높아진다. 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검토된다. 추가고용장려금이 신설돼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5000명, 내년부터 2020년은 매년 신규 2만 명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했다. 2018년까지는 3개월간 30만 원, 2019년부터는 6개월간 50만 원 규모다. 2020년부터

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년일자리 보장하기 위해 희망 퇴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등 단계별 인생3모작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현행 150개소에서 175개소까지 늘리고,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2018년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자영업자

전략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국정과제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을 늘리고, 초단시간근로자와 장기 실직자의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마련한다.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2019년에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취업상담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 영세 자영업자, 신중년(60~75세) 등에 대한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산업별로 '자격-교육' 및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도 설계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기획재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신성장·유망 서비스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체계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마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안에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

맵을 수립하고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인 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나선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채권을 소각해 시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제를 도입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출금액이 담보로 잡힌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사전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사후규제는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행정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내실화한다.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에는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고 내부통제의 질을 향상하는 등 금융사의 투명성을

“여성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만들어주세요”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취업 문제다. 비좁은 취업문을 뚫지 못한 수많은 청년이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하니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과 청년구직촉진수당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 and 채용을 돕는 정책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꾸준히 미래 유망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갔으면 한다. 다양한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성별이나 나이,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경아 | 21·대학생

강화한다. 2018년에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혁신 인프라를 위해서는 2018년 이후 법·제도 정비로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⑥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정부는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시장질서를 타파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감시 역량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한 축이 되고 고용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해소하는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기술 유통, 부당 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회계 규율을 정비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주가를 조작하면 엄중 처벌하고,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감리주기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제도 강화해 5~7년의 형벌 기준

을 10년으로 늘리고, 기존 20억 원의 과징금 한도는 폐지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금산분리도 추진한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

한 법 집행과 사면권 심사도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방지하며,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를



충남 천안시의 남산중앙시장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전략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국정과제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
 -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개선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한다.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 집단과 유통·가맹·대리점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확대도 검토한다.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감시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2018년까지 범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정위-지자체’ 간 법 집행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18년에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소액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촉진하는 동시에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발전위원회 등 관련 법제의 효과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금융 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기재부는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임 조달체계를 만든다.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도 연내에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희·국·공유 시설 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2018년에는 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 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을 반영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의 도시재생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2018년부터 적합 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특히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2018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중요 업종 대상 4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올해 안에 개발해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제조업체 중 3차 협력사의 공정성 체감도가 전년(82.4%) 대비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⑥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 펼치길”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소규모 자영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다. 그런데 소규모 자영업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많지 않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소규모 가게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편의점 때문에 동네에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각종 프랜차이즈 빵집·음식점 등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식당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골목상권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갈수록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그런데 정부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골목상권이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단체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단계별로 확대 설치해 대기업의 ‘갑질’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갑질’ 문화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명수 | 61·자영업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서민 금융지원체계 구축, 교통·통신비 절감

문재인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주도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민 금융지원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상권내몰림 방지를 제도화해 소상공인의 생업 터전을 보전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에 복지수당을 신규 도입하고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보급률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과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을 늘린다. 2018년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올해 105

만 명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2년까지 16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내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를 제도화하고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한다.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가 10만 개 창출되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만 5000명이 양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과 중도해지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 ISA

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저금리 대출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한다. 올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20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자를 추진한다.

한편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도 지원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장발장은행은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의 이름을 딴 대출기관이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힌 이들에게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곳이다.

국무조정실은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을 도입해 국민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차등화 정책을 시행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도 추진한다. 수요자의 시각에서 일자리·창업·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반대로 생명·안전·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한다. 올해부터 관련 주요 규제 완화 시에는 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강화한다. 또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규

사진



서울 강남구 강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학생들이 금융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전략3 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국정과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위해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소비자·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록 상세 공개, 위원 윤리규정 도입 등을 추진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급행철도 착공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 등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일정 시간 동안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을 통해 2018년 ‘광역교통청’을 만들고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철망에는 단계적으로 급행열차를 도입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하고 요금할인율도 상향하는 한편,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내에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 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1만 1000원을 더 깎아 준다.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그리고 전국에 운행 중인 버스와 지하철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 구축한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도 추진하며,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알려주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또 통신시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하고 통신시장의 투명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 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해외 건설의 수주 목표는 향후 5년간 총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의 간접비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또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지급보증제가 도입된다. 임금지급보증제는 사업주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체불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한다. 2020년 표준운임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8만 명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통행료 인하와 벽지 노선 운영, 일반 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를 이룰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 계획

“서민 위한 중저금리 대출 늘려주세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면서 드는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 한 달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만 1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정부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반가운 소식이다. 교통비·주거비 등은 정책으로 가격 인하가 되지 않으면 쉽게 절감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해 중·저금리의 대출 지원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는 분명 내 집 마련이나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많은 사람의 이자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은 줄어주고 삶의 질은 높아졌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황민철 | 31·직장인

을 수립하고 성능 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제를 마련해 노후 도로를 개선한다. 대중교통 낙후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선 2018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㉔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신속표준제도 도입,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시키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 중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5세대) 통신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8월 출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계가 올해 3분기 내로 수립된다.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현재 1기가 수준인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10기가까지 확대하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2018년 상용화한다. 2019년에는 5G를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법체제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에 나선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 및 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로써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정부는 전기차·수소차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통해 자동차-ICT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수소차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통해 자동차-ICT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차·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분야를 위한 투자도 지원한다.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사업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 바이오, 마이크로 의료 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 도로 등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표준·인증과 관련해서는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 대응지원센터 운영, 신기술에 대한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을 진행한다. 신속표준제도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표준이 없는 경우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는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과학기술 총괄부처의 R&D 관련 예산 권한을 강화하고 정책과 예산, 평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19년부터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본격 운영해 각종 R&D 관리규정과 시스템, 서식을

전략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국정과제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일원화·간소화한다.

올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2배로 확대되며 정부가 1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구과제 관리·평가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과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 중심, 과정 존중)된 평가체계를 정립한다.

‘코리안 메이드(Korean-Made) 전략’ 수립

근로계약 체결, 적정 임금과 연구성과 보상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은 물론 4대 보험 보장 의무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겐 연금을 지원한다.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경력단절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 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22.6%에 불과했던 이공계 대학 전임교원의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해 에너지 신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산업구조를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

다.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도 개선한다.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따라 발전사가 줄어드는 RPS 의무 비율을 2023년 이후 10%,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선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T 기반 신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 분야에선 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핵심 분야별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 2018년 주요 산업기기에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며, 2020년 공공 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국가 열지도도를 구축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중증희귀질환 가구도 추가한다.

정부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동시에 스마트화, 융·복합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 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2019년을 목표로 산업 전반의 선제적인 구조조정도 확산시킨다.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수출기업화를 위한 방안으로 ‘코리안 메이드(Korean-Made) 전략’을 수립한다. 한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정부가 되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산업, 경제, 문화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 나 역시 3D프린팅에 매력을 느끼고 ‘매직스랩’을 창업했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신속표준제도 도입, 각종 규제 개선 추진 정책 등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해 교육과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인프라를 탄탄하게 조성해나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청년 과학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처우 개선에도 힘쓰다고 하니 안심이다. 다양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을 꿈꿔 자유롭게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인욱 | 29 · 매직스랩 대표

류 활용 해외 마케팅, 소비재 선도 기업 100개사 선정 등을 통해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신산업,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턴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지원제도는 2018년까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5000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2022년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 일자리 5만 개, 유턴기업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㉔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창업국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정부는 낙수효과 단절 및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소득 주도 성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정부는 대출이 아닌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엔젤투자 활성화, 펀드조성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특례 등을 제공해 원활한 회수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술창업자 5만 6000명을 육성하고 성장 단계별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에는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 재도전 환경도 제도적으로 손질한다. 2018년까지 창업 7년 이상인 성숙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심사를 거쳐 면제할

방침이다. 민간 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실패자의 소액 채납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내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으로 실패 부담을 덜어준다. 2022년까지 5만 5000명의 성실실패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를 달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와 지원사업 유사 중복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소벤처기

업부는 장관·차관을 1명씩 두고 그 아래 4실 13관 41과 체제로 구성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되고 기획조정관이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된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행위)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제로 전환, 지원 규모·기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



신경

전남 지역의 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

전략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국정과제 ●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한다. 약속어음은 구매 기업(어음 발행 기업)이 거래관계상 '갑'의 지위를 악용해 어음 결제 시기를 미루면서 납품 기업, 주로 중소기업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해외직접판매,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별 수출협의회 운영하고 수출지원센터 확충과 지역전략산업 특화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도 지속해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을 2022년까지 120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에 함께 진출하도록 '중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조합 추천 제도'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개발·육성,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직판 지원 조직 강화로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9만 2000개였던 수출 중소기업 수가 오는 2022년 11만 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D 지원 확대로 5년 후 일자리 6만 5000개가 창출되고,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다.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 원+이자)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까지 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 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운영할 방침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실시한다. 확산 캠페인과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10만 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지난해 2.8%(26만 명)에서 2022년 2.3%(21만 명)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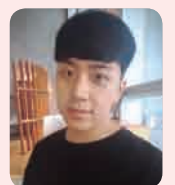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했으면”

우리나라의 중견 및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한다. 그렇다 보니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리가 나온다. 최근 극심해진 취업난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시선을 돌리는 취업 준비생의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대기업보다 발전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면 우수한 인력이 대기업에만 쏠리는 현상이 줄어들 게 분명하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독일, 일본 등 18개 선진국 가운데 경제 회복성이 우수한 국가들은 중규모 기업의 비중이 확연히 높다고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기업이 성장한 후 이익의 일부를 노사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킨다고 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기업문화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치려는 청년이 늘어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길 기대해본다.



임직원 | 25·대학생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확보,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교육제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확보를 목표로 재편된다. 하반기부터 대학(원)생은 융합전공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고, 학사제도의 유연화로 1년 만에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여성 분야에서는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체계에 방점을 찍었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환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크게 보호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 때 입원 적합성 심사와 2인의 전문의에 의한 입원 결정 등 입원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흡연도 연말부터 금지된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예측 시스템을 시행하고,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7월 20일 발간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정부부처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27건을 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여성·보건복지·환경 부문의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본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여성·육아·보육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추진 배경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일** 2017년 9월 4일(※백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산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 대상을 9월 1일(예정)부터 출산(조산·사산) 및 유산한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비를 지원했으나, 오는 9월부터 임신 상태가 종료(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태아는 50만 원, 다태아는 90 만 원을 지원한다.

추진 배경 임신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2017년 9월 1일(예정, 법제처 심사 중)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9개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430명상이었으나, 올해부터 통합치료센터는 4개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신규 25명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로써 고위험 임신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치료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추진 배경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시행일** 2017년 하반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200만 원으로 인상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

도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 특례는 2014년 10월 1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고, 2016년 1월 1일 첫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가 이번에 둘째 이후 자녀부터 ‘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추진 배경 출산 장려 및 순차적 육아휴직 활성화 **시행일** 2017년 7월 1일

기간제 근로자 사후지급금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수령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 시에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 계속 근로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산부인과 전문 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1연합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다학기·유연 학기를 통해 진로 탐색과 인턴 등 취업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학사제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별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경우 1년 만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하다. 벽지·오지의 군인 등 특정직군 근무자나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 등도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 **주요 내용**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융합전공 등 전공 종류 선택 강화, 집중이수제 및 출석 기준 명확화,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등 수업의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 운영 유연화 **시행일** 2017년 5월 8일~대학 학칙 개정 후 2학기부터 적용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추진 배경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선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청년 여성으로 확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도 맞춤형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은 하반기부터 청년 여성이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조직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도 맞춤형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재직 여성 등이 여성인재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중간관리자 기본과정(기업·공공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임원 후보군, 전문직 여성 등 교육) 수료생 대상 조직관점 관리 역량 강화, 조직문화 변화 촉진 등 심화 과정 교육 신규 개설 **시행일** ① 신입

추진 배경 교육 대상 신규 확대 및 교육 질적 제고를 통한 여성 리더 양성 **주요 내용** ① 청년 여성(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대상 조직 적응력 강화, 경력 개발 플랜, 필수 커뮤니케이션 등 교육 신규 개설 ② 중간관리자 기본 과정(기업·공공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임원 후보군, 전문직 여성 등 교육) 수료생 대상 조직관점 관리 역량 강화, 조직문화 변화 촉진 등 심화 과정 교육 신규 개설 **시행일** ① 신입

직원(2년 차 이하): 2017년 9월, ② 대학생 등: 2017년 10월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부모교육의 질도 부쩍 높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12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 강사 약 2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공통·성인교육 외에도 미래의 예비 부모인 중·고생, 영·유아 자녀 부모, 초·중·고생 자녀 부모 등 세부적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체계화했다. 아버지 교육과 가족 특성별 특화교육 등을 마련해 각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에도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강사를 연계한다.

추진 배경 체계적인 부모교육 표준 매뉴얼·콘텐츠 마련으로 효과적인 부모교육 실시 및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시행일** 2017년 7월

교육

융합전공 등 학사제도 유연화

2017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은 융합전공 등

보건·사회복지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연말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 차원에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2017년 12월 3일부터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에 위치한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중 이용 체육시설 중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추진 배경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주요 내용** (현행)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추가)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또한 금연구역 지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더욱 두터워진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모든 강제 입원에 대해 입원 적합성 심사를 도입, 입원 전 2주간 진단병원 도입 및 2인의 전문의에 의한 입원 결정 등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지자제장에 의한 입원은 최대 6개월만 입원시킬 수 있던 기간 제한을 없애 실효성을 높이고,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진 배경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신청 가능

보험료 납부 재개를 통해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를 허용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지만 연금액이 월 0.5%씩 줄어든다. 그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17년 217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적으로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했지만, 앞으로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 정지 신청과 보험료 납부 재개를 허용해 연금액 감면

을 만회하는 등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추진 배경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 허용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희망키움통장 I 월 5만 원 저축도 선택 가능

8월부터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는 월 5만 원도 저축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올 8월 1일부터 월 10만 원 저축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본인 적립금 5만 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60만 원인 4인 가구가 희망키움통장 I 월 5만 원을 적립하고 월 근로소득 장려금 23만 원을 받으면 3년 후 약 1000만 원(본인 적립액 180만 원 포함)을 수령하게 된다.

추진 배경 최근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져 월 1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 저축액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 제한 요인으로 작용 **시행일** 2017년 8월 1일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시행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에게 대해 매년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안내해주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시행한다. 이력 관리란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나 수급자였다가 탈락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력 관리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이후 5년간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추진 배경 연금 수급 희망자가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 **시행일** 2017년 8월 9일



새벽 태릉선수촌에서 2018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2017년 2학기부터 융합전공 등 학사제도가 유연하게 바뀔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도 학교 밖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 연합뉴스

공무원,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해 취업자들이 노후 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현행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퇴직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추진 배경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청소년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청소년 우대의 증표이자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분실 신고와 발급이 간편해진다. 복지포털인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추진 배경 온라인 분실 신고, 재발급 시스템 마련을 통한 청소년증 이용 확대
시행일 2017년 12월(예정)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예측 시스템 개발

여름철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균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연안의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동향 정보를 사전 예보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상처를 통해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년 약 50~60명 발병해 50%이

상 사망하는 질환이다. 예보 시스템은 올 연말 구축을 목표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6~10월 기간 중에 시험운용을 통해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양상을 검증하고 사전 예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추진 배경 비브리오패혈증 사전 예방을 위한 발생 예측 모델 개발 및 사전 예보 시스템 운영
시행일 2017년 11월 31일(2017년 6월부터 시범운영)

환경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의료비·간병비·생활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7년 8월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진 배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
시행일 2017년 8월 9일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

2017년 9월부터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운행 중인 차량의 결함 확인 검사 시 실도로 조건의 배출기준을 이미 적용 중이다.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이 시행되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실질적으로 저감해 도심 대기질 개선은 물론 미세먼지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작차 배출 가스 인증

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되며,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추진 배경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 ①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적용(1단계: 실내 인증기준의 2.1배 이하, 2단계: 1.5배 이하) ② 제작차 배출 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선
시행일 2017년 9월 1일(실도로 배출허용기준), 2017년 12월 28일(과징금)

토양 위험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에 정화곤란부지도 포함된다. 현재의 위해성 평가 대상은 ① 오염된 국가부지 ② 정화 책임자 불명 등으로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부지이며, 이외의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화곤란부지(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가 위해성 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 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 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배경 오염된 토양의 합리적 관리로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시행일 2017년 9월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

석면 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질병 진단 지정병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지정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에 55개소였으나, 대도시에서 편중돼 피해자들의 병원 이용이 불편했다. 2017년 8월부터 300명상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해 약 111개소로 늘린다.

추진 배경 석면 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 편리성 제고 및 피해 인정기간 단축
시행일 2017년 7월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차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온라인상으로는 기획재정부나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7만여 정부서비스 한 곳에... '정부24' 개통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류 발급, 여권 만료일 확인, 소득확인증명 등 정부 각 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통합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서비스 통합포털, '정부 24(www.gov.kr)'다.

정부24(www.gov.kr)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정부를 한 번에 만나는 통합 창구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7만여 건을 모아 주제별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각 기관별 개별 사이트에서 분산 제공됨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행정서비스통합 연계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한다면 '정부24'에서 주택 가격 조회,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 등기부등본 열람, 전기요금 확인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할 수 있다. 결혼을 할 때는 공공시설 예식장 이용과 주택 특별공급 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24'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민원24'와 소득확인증명(홈텍스), 건강보험 자격, 국민연금 자격 변동과 같은 이용률이 높은 주요 행정서비스 22종을 한데 묶었다. 그동안 '민원24'에서 국민이 많이 이용했던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과 열람,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토지(임야)대장 발급과 열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전입신고 등이다. 앞으로 3년간 행정서비스 282종을 추가로 '정부24'와 연계해 2020년부터는 정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가 많다. 그간 많은 사람이 불편해 하던 액티브 엑스(Active-X)를 걷어내고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지급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뿐 아니라 카오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 결제 방식도 가능하다.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도 가능하다. 컴퓨터로는 1465종의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는 371종이 신청 가능한데, 2019년까지 휴대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을 700여 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채팅 방식의 검색서비스가 도입되며, 내년에는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증과 휴대전화로도 민원서류를 인쇄하는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도 보안성을 검토해 적용할 전망이다.



자료 | 행정안전부

기존 민원24(www.minwon.go.kr) 회원이라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 활용 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까지 행정서비스 282종을 정부24에 연계해 2020년부터는 정부의 주요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민원24 서비스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26일 서울역에서 '정부24' 개통식을 열었다.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부24' 웹·앱 체험, 체험 소감 작성, 발전 방안 제안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누구나 '정부24'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G**

임언영 | 위클리 공감 기자

8월 둘째 주

●유창혁 9단,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우승

유창혁 9단이 1999년 8월 7일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유 9단은 1984년 입단해 국내 대회 18회, 세계 대회 6회 우승을 차지하며 전설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유 9단은 세계 대회(인창치배, LG배, 삼성화재배, 후지쓰배, 춘란배)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했다. 사진은 유 9단이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학자들과 실력을 겨루는 모습.



조진DB

7일

한민



●제2공화국 성립

1960년 8월 8일 제2공화국의 첫 국회가 개원했다. 같은 달 12일 민·참여원 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이 208표(재석 259명)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제2공화국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후의 의원내각제 정부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짧았다. 1960년 7월 29일부터 1961년 5월 18일까지 9개월 21일간 존속했다. 사진은 윤보선 대통령 취임식 모습.

8일

●손기정,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1936년 8월 9일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날 손 선수의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올림픽 신기록이었다. 앞서 그는 1935년 올림픽 예선전에서는 2시간 26분 44초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사진은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



한민

9일

뉴스



●우장춘 박사 별세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가 1959년 8월 10일 향년 61세로 사망했다. 우 박사는 동경제국대학 농학과를 졸업한 뒤 육종학 연구자로 활동했다. 1930년대 초 배추 유사 식물의 교배를 통해 식물의 유전적 근연 관계를 파악하기도 했다. 특히 1936년 그가 내놓은 '종의 합성' 이론은 그의 명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는 1950년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에 취임해 채소 품종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사진은 2012년 우장춘 박사 흉상 앞에서 그의 뜻을 되새기는 추모제가 열린 모습이다.

10일

●조오련, 대한해협 도영 성공

1980년 8월 11일 조오련 씨가 부산 다대포 앞 방파제를 떠난 지 13시간 16분 만에 일본 쓰시마 섬(대마도)에 도착, 대한해협 48km를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18시간보다 5시간 앞당긴 기록이었다. 그는 2년 뒤 도버해협 횡단에도 성공했으며 2003년 한강 240km를 헤엄치는 등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한민

11일

한민



●금융실명제 전격 단행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 단행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헌법 76조 1항에 의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해야 하며, 무기명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사진은 금융실명제 실시 첫날을 맞은 은행 창구의 모습.

12일

●베를린 장벽 설치

1961년 8월 13일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축조했다. 300만 명을 웃도는 동독 주민들이 보다 번영한 서베를린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 간 자유 왕래가 허용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장벽 중 약간은 역사적 기념물로 지금도 남아 있다. 사진은 베를린 시내 포츠담 광장에 옮겨진 베를린 장벽의 일부.



뉴스

13일



한국 스키 국가대표 1호 임경순 “지도자도 장비도 없던 그 시절, 정신력으로 승부했죠”

매년 겨울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과거 스키가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였다면 이제는 대중적인 문화가 된 셈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 속에는 역사가 있다. 이른바 ‘국내 스키 역사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임경순 선생을 만나 그의 발자취를 되짚어봤다.

“나는 선수이자 코치이자 감독이었다.”

한국 스키 국가대표 1호 임경순(86) 선생은 자신의 선수 시절을 이처럼 떠올렸다. 지난 8월 1일 경기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만난 임경순 선생은 첫 동계올림픽 출전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여전히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무려 5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임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국내 스키 역사의 굴곡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더불어 그 중심에 스키를 향한 임 선생의 애정과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도 분명했다.

그가 처음으로 스키를 탄 것은 약 7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 선생은 14세였고 중국 만주 지역에 거주했다. 임 선생은 “겨울이 되면 만주 북쪽은 쌓인 눈 탓에 이동이 어렵다 보니 일본인들이 스키를 이용하곤 했다”며 “그들이 스키를 타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나도 저것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버지 선물 스키로 십 리 길 크로스컨트리

만주에서 임 선생의 집안 형편은 비교적 괜찮은 편에 속했다. 덕분에 그는 아버지가 사준 스키를 타고 집에서부터 십 리 길을 크로스컨트리 하듯 무작정 달리곤 했다. 그게 스키 인생의 시작이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일본인들이 타는 것을 보고 흉내 내는 것이 전부였다. 스키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스포츠였음에도 그에게 강습은 사치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광복 이후 1946년 공산당을 피해 서울로 내려오게 되면서 스키를 탈 수조차 없는 환경에 처했다.

이듬해 임 선생은 신문을 통해 지리산에서 스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고 열망이 다시 타올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는 굶어야 할 만큼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지인에게서 버리기 직전의 스키를 얻어왔다”며 “그것을 들고 눈이 많이 내린 아차산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니 당장 다음 날부터 스키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용기를 내 출전 신청을 했다”며 웃어 보였다.

얼떨결에 대회에 참가하게 된 그였지만 놀랍게도 1등을 차지했다. 임 선생은 “골인을 했는데 심판이 스톱워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해 선수로서의 꿈은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57년 대한스키협회가 국제스키연맹에 가입하면서 국내 스키계 발전을 위해 1960년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임 선생이 올림픽에 공식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된 계기였다.

그는 “올림픽을 참가한다는 기쁨보다 걱정이 크다 못해 어떻게 대회를 치를지 모르긴 해도 공포가 어마어마했다는 게 정직한 답일 것”이라



곤지암리조트 내에는 임경순 선생의 스키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며 열악한 여건을 기억했다. 그를 비롯한 동료들은 전문 훈련은 커녕 밥통에 소량의 밥을 싸서 스키를 메고 눈 쌓인 곳을 찾아다니는 게 일수였으니 말이다.

올림픽 개최 장소에 도착하기 앞서 일본에서 장비를 준비하려던 계획마저 일본 측 입국 거부로 무산됐다. 선수단은 장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싱글 양복에 넥타이만 매고 겨울 대회를 가게 됐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으나 마침 구원자가 나타났다. 임 선생은 “미국 동계스포츠단 총감독이 한국 선수단은 스키도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직접 찾아와 유럽 유명 선수들에게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스키 두 벌을 주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급 장비에 익숙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했다. 활강 연습을 하다가 크게 넘어져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선수로서, 코치로서, 감독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해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임 선생은 대회에 출전했고 70명 중 활강은 61위, 회전은 40위를 기록했다. 넘어져도 절대 기권하지 않고 얻어낸 결과였다. 그는 기록에 대해 “국내 선수가 그 정도로 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처음이었으니 내가 어느 정도 기록을 내는지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후배들이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 선생이 국제대회 진출 포문을 연 이후 국내 스키 대표선수들의 출전은 이어졌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86년 박재혁 선수는 첫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1996년 변종문 선수가 하얼빈 대회에서 드디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임 선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단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그를 포함해 18명으로 꾸려진 스키원로회는 최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 구체적인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임 선생은 한국 스키를 위해 또 다른 기여를 할 수 있음에 설렘을 드러냈다. ⑥



시니어 전문 고용 기업 에버영코리아 근로자 권선옥 씨
“70대 시니어가 지도 블러링 업무,
고독감 버리고 행복감 얻었다”

시니어 고용의 새 지표를 제시하는 기업이 있다. 에버영코리아가 그 주인공이다. ‘언제나 젊은 한국’이라는 회사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에버영코리아의 비전이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권선옥 씨를 만났다.

지난 8월 2일 경기도 소재 에버영코리아(EVER YOUNG KOREA) 성남센터에 들어서자 수십 대의 컴퓨터가 일렬로 배치된 공간이 보였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무실 풍경이지만 조금 다르다.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와 마우스를 움직이는 이들 모두 시니어라는 점이다.

“스물여섯 살이 되던 해 공무원 생활을 접고 전업주부로만 살았어요. 40년 넘게 주부로 지내다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이곳에서 또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권선옥(72) 씨가 웃으며 입을 뗐다. 3년 전 입사한 권 씨는 줄곧 네이버 지도 블러링 업무를 맡고 있다. 블러링은 네이버가 촬영한 거리뷰 사진에서 개인 정보와 연관된 부분을 지우는 일이다.

에버영코리아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권 씨가 맡은 역할을 비롯해 온라인 게시판에 욕설은 없는지 허위·과장 정보가 게재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연령대는 55~84세. IT 기업 이미지와는 이질감마저 들 수 있는 나이다. 하지만 권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고용시장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잡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설립된 지 4년 차에 접어든 에버영코리아는 은평·성남·춘천 센터 3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438명이 근무 중이다. 성별·경력과 관계없이 55~84세면 누구든지 서류 지원이 가능하고 심사를 거친 뒤 입사할 수 있다.

권 씨는 동네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취미생활을 하던 중 에버영코리아 채용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당시 그의 자녀들은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려감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뒤로는 응원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며칠 전에는 손녀딸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 “할머니가 자랑스럽다”고 했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전부터 컴퓨터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게임을 해봐선지 입사 후 두 달간 교육을 받으면 업무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교육 난이도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회사 측은 처음부터 시니어들의 IT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 회사 설립에 앞서 송파 시니어 클럽 소속 시니어들을 대상

으로 네이버 지도 블러링을 진행했는데, 생각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결과는 시니어도 근로자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었다. 이에 은평센터를 필두로 에버영코리아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업무 성격부터 근무 환경까지 에버영코리아의 운영 방식 자체가 시니어 중심이다. 센터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근무 시간은 하루 네 시간이다. 컴퓨터 모니터를 봐야 하는 작업인 만큼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정한 안과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별 회식비와 경조사비, 동료 생일을 챙길 수 있는 소정의 금액도 지원된다.

센터 내부에 마련된 혈압 측정기에 눈길이 향했다. 그러자 권 씨는 “시니어들은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지 못하다고 느끼면 혈압부터 잰다”며 “아주 유용한 기기”라고 자랑스레 말했다.

그와 인터뷰를 하던 중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근무자들이 휴게실로 쏟아져 나왔다. 50분 근무한 뒤 갖는 10분의 휴식 시간이었다.

시니어들은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던 권 씨는 “이곳에서 느끼는 행복은 여기서 일하는 모두가 느끼는 감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동료들이 퇴직 이후 느꼈던 고독감을 센터에서 일하며 모두 내던지게 됐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이 센터에서 지내는 생활이 본인에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도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시간을 쪼개 근무하고 새 경험으로 삶을 채움으로써 자신감을 얻었다는 이유에서다.

그에게 에버영코리아를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부탁하자,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즉답이 돌아왔다.

“시니어들의 정원. 제가 지금 여기 입사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지도 몰라요. 경쟁률이 꾸준히 올라 지금은 평균 20대 1이라고 들었어요. 할 수 있다면 가능할 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권 씨가 건넨 명함 뒷면을 보니 그가, 그리고 에버영코리아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듯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청춘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에버영코리아 성남센터 직원들이 오전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신은 누구세요?

아닐 아난타스와미의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남자>

〈만행: 하버드에서 화제사까지〉 저자인 미국 스님 현각이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 한국에서 온 승산 스님을 보스턴에서 마주했을 때다. 승산은 한때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책을 끼고 살았던 미국 학생에게 “당신은 누구세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현각은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승산은 “그건 당신 몸의 이름이다. 나는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싶다”며 다시 물었다. 현각은 이에 바로 무너졌다. 하버드 다니며 머리가 반짝반짝하던 그는 이 평범한 질문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자아란 무엇인가’는 큰 물음 중에서도 큰 물음이다. 철학자는 3000년간 이 문제에 매달렸다. 자아 문제는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때로 미혹케 했다.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남자〉는 자아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신경과학 책이다. 자아에 관한 질병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며 다시금 자아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자아 관련 질병 환자는 ‘자아’의 여러 측면을 보여준다. 저자 아닐 아난타스와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만난 연구자와 환자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려준다.

아난타스와미는 인도 첸나이에 있는 인도공과대학(IIT)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며 주로 과학에 관한 글을 쓰는 저자다. 그는 종교의 나라 인도인답게 ‘자아’에 관한 사유의 시작을 인도의 종교 전통에서 찾는다. 불교 중관파 경전에 나오는 자기 몸을 잃은 남자의 우화로 책을 연다.

이 남자는 버려진 집에 들어갔다가 도깨비들을 만난다. 도깨비들이 시체를 놓고 서로 자기가 들고 그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남자에게 당신은 우리가 각각 들어오는 걸 봤으니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말을 잘못했다가 화가 난 한 도깨비가 이 남자의 사지를 하나씩 떼어내고, 그때마다 다른 도깨비는 시체에서 사지를 하나씩 떼어 이 남자에게 붙여준다. 결국 이 남자의 몸은 시체의 몸으로 다 바뀌어 버리고, 남자의 몸을 가진 시체는 도깨비들이 다 먹어버린다. 몸이 바뀐 이 남자, 당황한다. 혼란스럽다. 나는 누군가?

그는 다음 날 길에서 만난 불교 승려에게 묻는다. “내가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승려들은 답을 주지 않았다. 되레 반문했다. “당신은 누구

입니까?” 이 남자, 2000년 뒤 미국 하버드대 학생 마냥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아난타스와미는 말한다. “이 남자가 오늘날 신경과학자에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답은 무엇일까?” 신경과학자들은 승려들로부터 1500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감질 나는 대답을 몇 가지 내놓는다.”

코타르증후군
환자는
자아를
부정한다

책이 다루는 자아에 관한 뇌 질환 8개는 코타르증후군, 알츠하이머병, 신체통합정체성장애, 조현병, 이인증(離人症, depersonalization disorder),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체이탈, 황홀성 간질이다. 들어본 병도 있고 낯선 질환도 있다.

코타르증후군 환자 일부는 자아를 부정한다. “내 뇌가 죽었다”고 말한다. 살아 있는 시체, 관 들어갈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고 이 환자를 돌본 신경의학자는 말한다.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죽었다고 생각하니 자살할 이유가 없다. 뇌의 일부 조직이 손상돼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자아를 부정하는 병이라니. 아난타스와미는 책 이름을 이 코타르증후군 환자의 증상에서 따다. 다행히 이 병 환자는 매우 드물고 병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한다.

신체통합정체성장애가 내게는 흥미롭고 쉽게 와 닿았다. 환상지(幻想肢) 혹은 환상사지라고도 한다. 내 다리이고 팔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말한다. 이 증후군을 오래 앓았고, 잘라내고 싶어 하는 강박증으로 평생 괴로워하다가 아내에게 고백한 남자 얘기가 나온다. 그는 아시아 어느 나라에 가서 끝내 자신의 다리 대퇴골 아래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야 말았다. 책 저자 아닐 아난타스와미는 수술 받으러 가는 그를 따라갔고 의사도 만났다. 수술 이후 몇 달이 지난 뒤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는 아난타스와미에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난생처음으로 그는 몸이 온전함을 느낀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학의 신경학자 라마찬드란은 환상

조현병 환자는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있다는 대목에서 나는 놀랐다. 보통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간지럼 태울 수 없다. 내 손, 내 몸을 내가 만지면 무슨 특별한 느낌이 있겠는가?

지 연구로 이름이 높다. 그는 팔다리 일부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 몸과 뇌 속의 신체 신경지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다.

신체통합정체성장애를 앓는 사람은 뇌가 팔다리를 인식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경우다. 남의 다리가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느낌은 불쾌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이물질이 달려 있는 느낌이라니. 반대 경우도 있다. 몸에 팔다리가 없는데도 붙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아는 증후군이다. 신경학자 라마찬드란은 환상지 연구를 저서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에 잘 소개해놓았다.

알츠하이머는 익숙한 병이다. 기억을 망가뜨려, 심하면 끝내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만다. 좀비가 되는 병.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이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하버드대학의 신경학자 루돌프 탄지는 “알츠하이머병은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사실상 규정하는 그 경계를 뜯어내버린다”고 말한다. 여기서 파괴되는 건 ‘서사적 자아’다. 이야기가 사라지면 자아에게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조현병 환자는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있다는 대목에서 나는 놀랐다. 보통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간지럼 태울 수 없다. 내 손, 내 몸을 내가 만지면 무슨 특별한 느낌이 있겠는가?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를 알아차리는 게 뇌의 일 중 하나다. 나와 외부 세계의 경계를 모르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조현병 환자 대개가 간지럼을 스스로 태울 수 있다는 건, 자기 행위와 자기 행동이 아닌 걸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목소리는 작게 듣고, 외부 세계 소리에는 민감하다. 뇌의 청각 피질 활동을 보여주는 N1이라는 뇌전도 신호는 건강한 사람이 소리를 내고 난 뒤 100밀리초 동안 약해진다. 자기가 낸 소리라는 꼬리표를 붙여 잘 들리지 않게 한다. 외부 소리에는 N1이 억제되지 않는다. 나보다는 외부 소리에 예민해야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현병 환자는 자기 발생적 소리에 대해서도 뇌의 N1 신호가 억제되지 않는다.

무아 진영에 비해 유아 진영은 초라하다

아난타스와미는 여덟 가지 자아 관련 질환을 소개한 뒤 책의 끝부분에서 자아가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자아의 여러 속성은 우리에게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통일성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야기, 행동 주체이자 생각 발기인이라는 느낌, 신체 부위를 소유한다는 느낌, 내가 곧 정서라는 느낌, 몸이라는 일정 부피의 공간과 내 눈 뒤편에서부터 비롯되는 기하학적인 시점 속에 위치한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은 대상으로서의 자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가 놀라우리만치 탄탄하면서도 연약하다는 걸 책을 읽고 나는 알았다. 책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도깨비에게 몸을 뜯어 먹히고 남의 몸을 갖게 된 사람이 다시 등장한다. 나는 있는가, 없는가? 철학자가 3000년 넘게 토론해온 내용과 20세기 후반 신경과학자의 연구를 두루 살펴본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철학자와 신경과학자는 두 개 진영으로 각각 나뉜다. 자아가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쪽이다.”

‘무아(無我)’파의 대표 인물은 붓다다. 18세기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흄과 미국의 인지철학자 대니얼 데닛도 있다. 붓다는 ‘모든 것은 계속 변한다. 그러니 불변의 자아라는 게 어디 있겠느냐. 그걸 본다면 집착 일 뿐’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데이비드 흄은 자아는 없다고 하고, 마음을 온갖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극장에 비교한다.

무아 진영에 비해 유아(有我) 진영은 초라하다. 논리도 약하다. 책 저자가 등장시킨 철학자는 미국 뉴욕대 조나단 가네리와 힌두교의 한 종파다. 설명도 짧다. 아난타스와미는 유아니, 무아니 하는 논쟁은 사실 별다른 의미 없다고 말한다. 두 진영 간 큰 불일치도 없다고 한다.

붓다는 기원전 6세기 갠지스 지역을 돌며 무아를 강조했다. 위대한 스승의 이 말은 내게는 희로애락, 빈부귀천, 생로병사, 길흉화복의 대상인 자아라는 옷을 벗어던지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자아가 만병의 근원이다. 자아과잉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의 귀결이다. ㉠

하루키 열풍,

부러워만 할 것인가

하루키 열풍이다. 2017년 무더운 여름 독서가를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신작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가 휩쓸고 있다. 초판만 한꺼번에 3쇄 30만 부를 찍었고, 이미 4쇄에 들어갔다. 이 같은 열풍을 반영이라도 하듯 정식 판매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주문만으로 국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지금도 정상을 달리고 있다.

물론 하루키 열풍은 그의 나라인 일본에서 가장 거세다. 지난 2월 출간되자마자 그의 소설을 사려는 독자들이 서점가에 긴 줄이 이어졌고, 무려 130만 부를 찍었다. 소설 한 편으로 그가 벌어들이는 돈도 천문학적이다. 출판사인 문학동네가 한국어 출판권을 따기 위해 지급한 돈이 20억 원이 넘는다는 소문이다. 7년 전 〈1Q84〉의 두 배다. 과잉 경쟁과 엄청난 선(先)인세 지급을 놓고 논란도 있었지만, 전례에 비추어 그래도 장사가 된다는 얘기다.

하루키도 자신의 소설이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사단장 죽이기〉의 한국어 출간에 맞춰 출판사를 통해 한국 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오랜 세월 제 책을 변함없이 열심히 읽어주신 한국 독자들에게는 늘 각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겉치레가 아니다. 〈상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의 숲)에서 2013년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에 이르기까지 그의 소설은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단골로 오르며 미국과 유럽에까지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은유와 상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의 소설을 두고 사람들은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은유와 상징이야말로 그의 문학을 독자적인 세계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온갖 동물에서 비롯된 상상의 세계서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은유와 상징의 키워드들은 때론 〈1Q84〉처럼 난해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하루키가 바라는 “읽는 이마다 다르게, 되풀이 읽을 때마다 새롭고 재미있게 읽히는” 이유다.

물론 그의 문학세계를 곱게만 보는 것은 아니다. 비록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그의 소설은 다분히 일본적 감상이며, 다채로운 소재와 은유도 독자의 물질적, 교양적,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는 통속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서양 독자에게도 통할 만한 매력적인 소재와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문학이 아닌 상업적인 대중문화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는 숙명적인 역사적 고리를 가진 우리로서는 그가 소설 속에 모티브로 집어넣는 역사와 현실에 대해 예민한 긴장과 불만도 숨기지 않는다. 뉴욕타임스가 2005년 ‘올해의 책 10’에 선정한 〈해변의 카프카〉도 그랬다. 아시아 작가로는 처음으로 하루키에게 ‘프란츠 카프카상’을 안긴 이 소설에서 일본 국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기억은 지우고 전쟁의 피해자만 기억하려 한다는 것이 좋은 예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사단장 죽이기〉에서는 1937년 일본군이 난징대 학살에서 4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했다고 서술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숫자보다 많다. 이를 두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고 이번에는 일본 우익이 반발했다. 그는 “사람들이 말을 마치 돌맹이처럼 다루며 상대에게 던져대는데 이것은 매우 슬프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역사에서 ‘순수한 흑백’을 가리는 판단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딱딱하게 굳어 죽어버린다는 것이다. 〈상실의 시대〉에서 그가 쓴 서문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작품에 따라 이렇게 비판과 냉소가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하루키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열풍’은 그가 말하는 명백한 실재이고 현상이다. 분명 독자들을 매료시킬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오히려 하루키 현상,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선에 위치한 또 다른 일본 추리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 열풍’까지 보다 냉철하고 편견 없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한국 문학을 세계 속에 더욱 확장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에 굳이 그 둘 사이에 선을 긋는 일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종면 교수(서울여대 국문과)의 말처럼 “순수문학 본연의 품격을 지키고 대중의 건강한 오락 욕구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중간 문학이 있다면 이를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상업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의 토양을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단장 죽이기〉는 하루키 소설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큼 그의 문학의 특징과 세계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과 관념의 세계가 아무런 경계 없이 뒤섞이고, 과거와 현재는 운명적으로 연결되고, 이성과 감정이 번갈아 이야기를 끌고 가고, 적당히 지성과 낭만을 드러내고, 일본적이면서 탈일본적인 색채를 덧씌우면서 궁극적으로는 따뜻한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하루키는 이를 비밀을 간직한 그림과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와 그 주변 인물, 이데아의 존재, 나치와 일본군, 날카로운 인간심리와 삶에 대한 통찰력, 끝없이 등장하는 음악과 섹스, 최고와 가장 대중적인 음식과 술을 통해 은유하고 서술한다.

그런 것들이 하루키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며, 그의 소설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독특한 맛과 대리만족, 선망을 느끼게 해주는지도 모른다. 하루키는 “이야기란 머리로 생각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만이 시간과 공간,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선량한 힘’을 지닌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야말로 단순한 지적 허영이나 기교가 아닌 깊은 내면화와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루키는 일본이란 땅을 딛고 있으면서도 국가와 민족과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마치 〈기사단장 죽이기〉의 주인공처럼 통속적이면서도 순수한 모습으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세계인과 호흡하고 있다. 이를 부러워할 할 텐가. 한국 문학도 언제든 가능하다. 작가와 작품에 보다 자유롭고 너그러우며, 그런 작가와 작품을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아낀다면. ㉠

이대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무라카미 하루키

이번 주엔 무엇하고 놀지?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 무대에 올라 화제다. 한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23명의 현대 회화 작가들의 전시회도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논문을 바탕으로
공감과 연민을 흥미롭게 해석한 책 등
이번 주도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한·영 현대미술 교류전

전시 | 페인팅 쇼(The Painting Show)

한국과 영국의 현대 회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전시회다. 한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23명의 현대 회화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 총 70여 점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영국문화원 소장품 가운데 2000년대 이후 영국 현대 회화의 흐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로 선정해 구성했다. 영국문화원 소장품은 영국문화원이 1938년부터 수집해온 회화, 프린트, 드로잉, 사진, 조각, 멀티미디어, 설치 등 8500여 점이 넘는 규모의 컬렉션으로 '벽 없는 박물관'이라 불린다. 한국과 영국의 현대 회화의 최신 동향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기간 9월 24일까지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2

그 날의 진실

연극 | 3일간의 비

미국 유명 극작가 리처드 그린버그의 <Three days of Rain>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국내 초연하는 작품으로 배우 오만석이 연출을 맡았다. 미국의 유명 건축가 '네드 제인웨이'의 아들 '워커'가 아버지가 숨진 뒤 맨해튼의 작고 허름한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워커와 누나 '낸'은 유산 상속을 위해 어린 시절 친구이자 '테오'의 아들인 '핍'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을 듣는다. 그런데 아버지 '네드'는 값비싼 '제인웨이 하우스'를 '핍'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해놓았다. 이 일로 '핍'과 갈등을 빚던 '워커'는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부모의 삶을 알게 된다.

기간 9월 10일까지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문의 02-764-8760



일제강점기 민초들의 삶

뮤지컬 | 아리랑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다. 일제의 앞잡이가 된 노비 출신 양치성과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끈 송수익, 일본 앞잡이들에게 유린당한 옥비 등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간 민초들의 삶과 사랑, 투쟁의 역사를 담아낸 작품이다. 제작 기간 3년, 제작비 50억 원, 100여 명의 스태프와 42명의 배우가 참여한 대작으로 초연 당시 총 68회 공연에 4만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대성공을 거뒀다. 2년 만에 재공연되는 이번 공연에는 서범석, 안재욱, 김우형, 윤공주, 김성녀 등 42명의 초연 멤버 중 31명이 다시 뭉쳤다.

기간 9월 3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2-577-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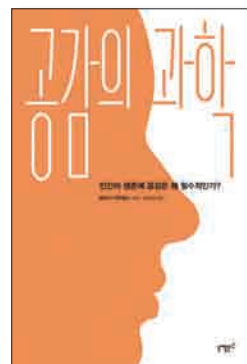


삶의 이정표를 세워라!

책 | 꿈꾸는 십대가 세상을 바꾼다

현직 교사인 저자 김지혜 씨가 전하는 10대를 위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다. 저자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해나가며 자신만의 인생 로드맵을 완성해가는 중이다. 그는 입시 전쟁으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책에 담았다. 그는 부모와 교사는 학생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등 인생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교사, 부모, 학생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김지혜(위닝북스)



공감이 주는 힘

책 | 공감의 과학

공감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건강하고 강인하게 만든다. 저자는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적고, 고통을 견디는 힘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 책은 타인의 감정에 너무 심하게 빠져들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소시오패스나 범죄자의 공감 능력을 살펴 우리 안의 선과 악, 인간성에 대해 파헤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공감과 연민'에 대한 수백 개의 새로운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 책은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의 아픔을 향해 공감할 수 있을 때, 사회는 좀 더 건강하게 결속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저자 베르너 바르텐스(웁킨이 장혜경·니케북스)

의욕 충만 경찰대생

영화 | 청년경찰

두 남자 '기준'과 '희열'은 경찰대생이다.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외출을 나왔다가 우연히 납치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두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한 시간에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절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찰 때문에 수사는 전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두 친구는 직접 납치범을 잡기로 결심하고 수사에 나선다. 이들은 납치 사건이 거대 범죄 조직과 연결된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알게 된다. 혈기왕성한 두 청년이 경찰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개봉일 8월 9일



그렇게 소녀는 애나벨이 되었다

영화 | 애나벨: 인형의 주인

손때 묻은 인형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2014년 개봉작 '애나벨'의 후속작이 개봉한다. 이번 영화는 애나벨을 만든 장본인인 멀린 부부가 겪는 일화를 그렸다. 비극적인 사고로 딸을 잃은 부부는 수녀원에서 소녀들을 집으로 들이기 시작한다. 부부의 딸은 죽은 뒤 인형 애나벨에 들어가 영원히 부모의 곁에 머물고 싶어 했다. 그런데 소녀들이 집에 오자 원한을 품은 애나벨은 계속해서 소녀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평화로웠던 멀린 부부의 집은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뒤바뀐다.

개봉일 8월 10일



오프 더 그리드 (off-the-grid)

등산로를 벗어나 제멋대로 펼쳐진 산간 오지를 두어 시간 걷는다. 길을 찾기 어려우면 전화 통화로 길 안내를 받기도 한다. 얼기설기 뿔뿔뿔 지어진 단출한 집 한 채가 느닷없이 나타난다. 대개 개 한두 마리를 데리고 사는 중년 이상 노년 이하의 싱글남이다. 보통 자기만의 체력 단련법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일과는 약초 및 버섯 채취, 장작 패기, 텃밭 농사, 산열매로 효소 담그기 등이다. 예술적인 취미 생활도 놓치지 않는다. 기타를 치거나 하모니카를 불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기기묘묘한 형태로 돌탑을 쌓고 풀피리 연주에 일가견을 보이는 이도 있다. 올해 6년 차를 맞았다는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애기다. 프로그램이 중턱쯤 다다르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등장하는 대사도 있다.

“혼자 산에서 사니 온종일 입을 뿔 일이 아예 없었는데, 이렇게 옆에 누가 있으니 웃을 일도 생기고 밥맛도 좋네요. 허허...”

그러다가 프로그램의 말미에 이르러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십 년 묵힌 산삼주를 병째 건네주며 화룡점정을 찍는다.

그런데 미국에도 (사실 미국에 뭐가 없겠느냐는) 우리나라의 '나는 자연인이다'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다. 미국의 로키산맥, 블루릿지마운틴 등 첩첩산중에서 홀로 악전고투하며 사는 이들을 다룬 '마운틴 맨(Mountain Men)', 산속이라는 점은 같지만 곰이나 늑대의 습격을 피해 나무 위에, 그것도 10미터 넘는 높이에 집을 짓고 사는 괴짜 외톨박이들이 등장하는 '우즈맨(Woodsmen)',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척박한 알래스카에서의 거친 생존게임을 보여주는 '라이프 빌로우 제로(Life Below Zero)' 등이 그것이다.

호칭은 같은 '자연인'으로 묶일 수 있지만, 이들의 야생 생활은 한국의 그것과는 천양지차다. 도보에 의지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광활하기에 스스로 별목을 해서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길을 내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말이나 노새라도 타고 다녀야 여기저기 흩어놓은 뒗을 관리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 어떤 미국 자연인의 개척기(귀촌기?)에는 이런 후일담도 등장한다.

“지도를 보고 마음에 들어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울창한 숲 때문에 자동차로는 올 수가 없어서 보름 내내 걸어야 했지요. 도착한 다음 건축 자재와 식료품 등을 주문했고, 비행기가 와서 제 위치에 떨어뜨려주었습니다.”

스케일의 차이가 실감나지 않는가. 한국 자연인이 자연의 품에 기대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나날을 보낸다면, 미국 자연인은 잠시만 방심해도 맹수나 자연재해 같은 자연의 일격에 목숨을 잃는 백척간두의 삶을 산다. 얼기설기 집을 지어서는 얼어 죽기 딱 좋으니 장비를 직접 만들어서라도 프로페셔널한 수준으로 집을 완성할 수밖에 없고, 산골 오지라고는 해도 웬만한 휴대폰이 터지는 우리와는 달리,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해도 조명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는 우리의 오랜 심성과는 달리, 자연을 개척의 대상으로 여겨온 그들의 시각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한국의 자연인들이 안빈낙도하는 도인(道人)이나 예술가 같다면, 미국의 자연인들은 문명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우주를 창조하고자 하는 공학도이거나 섬세하고 복잡다단한 인간적인 감정이 퇴화된 순수한 야생동물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저런 예술 행위로 홀로 사는 시름을 잊거나 눈물을 글썽이며 산삼주를 건네주는 법은 없다. 어둠 속에 잠복한 야생동물처럼 그들은 주위의 위험 요소들을 향해 항상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다. 왜 굳이 그런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오지로 들어왔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헛바퀴 도는 문명화된 삶이 너무도 갑갑했으며, 전기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삶을 꾸려보고 싶었노라고 말한다. 그것은 한국의 자연인들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욕구이며, 나아가 더하고 덜한 차이는 있을망정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잠재적 욕망이다.

‘오프 더 그리드(off-the-grid)’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같은 공적 시스템에서 벗어난 생활방식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냥 소박하게는, 휴대폰이나 소셜 미디어를 중단하고 ‘잠수 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휴가란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체계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오프 더 그리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니 산과 계곡, 바다에서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초강력 거미줄’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 보라. 스마트폰을 꺼보라. 흡사 그물에서 놓여난 물고기처럼, 거미줄을 벗어난 나비처럼, 내면의 자연인이 기지개를 켤 것이다.

구승준 | 칼럼니스트·번역가

2017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 예고

유능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초빙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예정 계획'을 사전 안내합니다.
세부 공개모집은 기관별 선발일정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직위별 자세한 모집 공고는 나라일터와 해당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다립니다.



세부 선발 예정 내역

- 선발 예정 규모 : 총 17개 기관, 33개 직위(고공단 10, 과장급 23)
 - ▶ 민간인만 모집하는 직위 : 총 9개 직위(고공단 1, 과장급 8)
- 일정별 선발 계획

예정 시기	부 처	직 위	구 분	모집대상
7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과장급	민간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	고공단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
		정보화통계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외교부	부대변인	고공단	민간인/공무원
		녹색환경외교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8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연구원장	고공단	민간인/공무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고공단	민간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과장급	민간인
		장애인고용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교육부	강원대 사무국장	고공단	민간인/공무원
		목포대 산학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전남대 국제협력과장	과장급	민간인
		제주대 산학협력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토교통부	공항행정책관	고공단	민간인/공무원
		공항안전환경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재정성과심의관	고공단	민간인/공무원

예정 시기	부 처	직 위	구 분	모집대상
9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고공단	민간인/공무원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10월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과장급	민간인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고공단	민간인/공무원
	조달청	감사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과장급	민간인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고공단	민간인/공무원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선도기술사업팀장	과장급	민간인



기타 유의사항

- 위의 기관별 선발 직위, 선발 예정시기 등은 예정 사항으로서, 각 기관별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선발시기, 응모자격 등 모집공고는 매월 초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또는 '선발예정기관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선발예정기관 인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 044-201-8353)

파란여름속으로 **탁** 떠나버려야

“여기 정말 그림 같다!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